



■ 정책보고서 2013-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정기혜 · 김동우 · 조주연 · 송다영 · 김동영

【책임연구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국무총리실, 2012(공저)
2012년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서울시,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동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조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송다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	8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02
제2장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7... 2
제1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9 2
제2절 사회분야 국가통계 현황	1 3
제3절 향후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2 3
제4절 시사점	3
제3장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9 3
제1절 조사설계	1
제2절 2013년 조사계획	81
제3절 사전조사	6
제4절 시사점	6
제4장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9... 5
제1절 조사 개요	6
제2절 조사 결과	6
제3절 세부 조사결과	5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Ⅶ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0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2
부록	117
부록 1.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711

표 목차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6
<표 2> 표본설계 기본원칙	6
<표 3> 조사실시 개요	7
<표 4>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8
<표 5>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8
<표 6>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와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비교표	9
<표 1-1> 표본설계 기본원칙	0... 2
<표 1-2> 조사설계 개요	1... 2
<표 2-1> 국가통계 작성현황(기관별)	9... 2
<표 2-2> 국가통계 작성현황(분야별)	0... 3
<표 2-3> '사회' 관련 분야별 주요 승인통계	1... 3
<표 2-4> 분야별 주요 통계 개발 및 개선 과제	2... 3
<표 2-5> 향후 5개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3... 3
<표 2-6>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와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비교표	7... 3
<표 3-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1... 4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3... 4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4... 4
<표 3-4> 식품패널	5... 4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6... 4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7... 4
<표 3-7> 조사실시 개요	8... 4
<표 3-8> 설문지 구성	9... 4
<표 3-9> 조사 개요	0... 5
<표 3-10> 사전조사대상 성, 연령, 지역별 표본 선정 현황	1... 5
<표 3-11>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2... 5
<표 3-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3... 5
<표 3-1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4... 5
<표 3-14> 각 분야별 안전체감도 비율	5... 5
<표 3-15> 수정된 본조사용 조사표	6... 5
<표 3-16> 각 영역별 안전체감도 점수	8... 5

<표 4-1> 본조사 식품패널 구축 개요	1	6
<표 4-2> 본조사 대상 식품패널 현황	2	6
<표 4-3> 본조사 조사성공 현황	3	6
<표 4-4> 본조사 조사 거부 등 현황	4	6
<표 4-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5	6
<표 4-6> 일반적 특성(2)	6	6
<표 4-7> 2013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체감도	7	6
<표 4-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8	6
<표 4-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8	6
<표 4-10>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9	6
<표 4-11>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0	7
<표 4-12>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7
<표 4-13>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 관심정도	1	7
<표 4-14> 정보 구독 매체	2	7
<표 4-15>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3	7
<표 4-16>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 현안	3	7
<표 4-17>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4	7
<표 4-1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5	7
<표 4-19> 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정도 비교	6	7
<표 4-20> 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비교	7	7
<표 4-21> 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비교	8	7
<표 4-2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정도	9	7
<표 4-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정도의 세부분석	0	8
<표 4-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	8
<표 4-25> 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2	8
<표 4-26>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정도	3	8
<표 4-27> 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의 안전정도 비교	4	8
<표 4-28>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5	8
<표 4-29> 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6	8
<표 4-30>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7	8
<표 4-31> 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비교	8	8

<표 4-32>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	8	
<표 4-33>	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0	9	
<표 4-34>	외식의 안전정도	1	9	
<표 4-35>	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정도 비교	2	9	
<표 4-36>	외식 안전하지 않은 이유	3	9	
<표 4-37>	대상자 특성별 외식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4	9	
<표 4-38>	유통식품 안전정도	5	9	
<표 4-39>	대상자 특성별 제조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비교	6	9	
<표 4-40>	제조·유통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	9	
<표 4-41>	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8	9	
<표 4-42>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9	9	
<표 4-43>	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0	0	1
<표 4-44>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	0	1
<표 4-45>	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비교	2	0	1
<표 4-46>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3	0	1
<표 4-47>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4	0	1
<표 4-48>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0	1
<표 4-49>	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비교	6	0	1
<표 4-50>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7	0	1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4	2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5	2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2	4
[그림 4-1]	2013년 식품안전관리	7	6
[그림 4-2]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9	6

Title: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3

To ensur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the safe communit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lected and concentrates on rooting out "four social evils." The low-quality food is one of the social evils with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To eradicate the low-quality food,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s planned to be investigated annually and to be announced at the end of each year. Since individual perception of food safety area has a major impact on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national policies, understanding consumer's perception became important.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the system for annual survey of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to calculate the level of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3. Detail purposes are as follows; 1) Build up the survey system for statistical sampling; 2) Develop questionnaire for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3) Implement pilot survey for reliability test on the questionnaire; 4) Investig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2013; 5) Calcul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2013; and 6) Suggest policies for efficiency of annual survey.

In this study, panel survey was used. Though building panel of 1,000

people is relatively expensive, it has a meaning that time series analysis is achievable by this longitudinal study. Considering attrition rate, telephone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to a panel of 1,115 people. Final sampling unit was individual level and probability sampling was used with three sampling units; gender, age and region. Statistics used in this study will be the only national statistics in food area.

Total seven investigation areas, which are safety of foo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safety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safety of communal food service; safety of eating out; overall safety of imported food; and overall level of food safety management, were studied. Overall Cronbach's alpha value appeared as 0.71 and each investigation area is also above 0.6, meaning reliable. There are 72.2% of answers that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s above average from this year study. Safety level of foo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were evaluated above average by 79.4% of people from the panel. On the other hand, only 43.0% answered that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is above average.

928 people completed the survey, so success rate of the investigation was 83.2% which is a relatively low rate. Therefore, for the next study, mapping out a specific management plan for food panel will be needed. Also, review and confirmation on survey system from current year is essential. According to the result, insufficient crackdown by government, lack of safety awareness of vendors, actual experiences affected low level of perception of food safety. As a result, future measures and publicity will be needed.

* Key Words: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Panel survey, Building up survey system, Sample design, National statistic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사회약 선정 및 근절에 국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4대 사회약에는 3대 폭력 근절과 더불어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어있음
-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약처를 설치하여 식품안전의 총괄기구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식약처내에는 불량식품근절단을 설치하여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수행, 계획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해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여 매년 연말에 발표하기로 계획
- 현대사회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강조되고 있지만 식품안전분야에서의 소통 강화는 더욱 필요함. 타 분야와 달리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반면에 소비자는 경험적, 감성적인 측면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간극(gap)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정권에서 발생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식품안전분야가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타 분야보다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 소비자의 인식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음.
- 식품안전분야가 질병, 전쟁, 교통사고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큰 분야로 조사됨을 감안할 때 안전한 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식품안전분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을 파악함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것임.

- 영국, 일본 등은 이런 중요성에 입각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고, 조사내용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의 정책현안을 조사하는 부가조사로 이원화되어있음.
- 우리나라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2012년 국무조정실이 연구위탁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설계된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구축 한 바 있음¹⁾.
- 현재 기재부, 복지부 등 타 분야에서 정책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패널조사(panel survey)를 실시기로 함. 비록 예산 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한 종단면적 조사(longitudinal survey)인 패널조사를 위하여 20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성, 연령, 지역별로 층화추출하여 총 1,000명의 식품패널을 선정하기로 설계함.
- 이와 같이 정형화된 조사체계에 의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그 활용도가 전 부처에 걸쳐 확대될 것이고, 또한 매년 실시되는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집행, 연구 등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는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통계 조사의 한 분야인 안전에 속해 있었는데 성격상 식품안전부처에서 생산하기로 결정된 바 있어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곳이 없는 실정 이므로 새정부 출범에 따라는 국무조정실이 실시하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유일한 식품안전분야의 국가 승인통계가 될 것임.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2013년 조사가 첫해이자 1회 조사라 시범조사 성격이 있지만 명년에는 상, 하반기의 2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식품패널도 제대로 설계되어 완벽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1) 정기혜 등,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국무총리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4대 사회악에 포함시켜 식품안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식품안전은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안심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은 식품정책 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이런 시대적 요구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매년 소비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통계학적인 표본추출 등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 둘째,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설문지(Questionnaire) 개발
- 셋째, 설문지의 신뢰도 측정 등을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넷째,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실시
- 다섯째, 2013년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 여섯째, 정형화된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확정 등 매년 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2. 주요 연구결과

가. 조사설계

- <표 1>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내용이 제시되어있음. 2012년 제주도를 포함한 20세 이상 전인구를 모집단으로 1,000명의 패널을 선정하는 표본 및 패널조사로 설계되어있고, 올해는 하반기 1회만 조사가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12월말에 발표될 예정임.
- 명년부터 조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 조사주체는 국무조정실임.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1,200명	조사성공을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및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결과발표	매년 12월 말	

나. 표본설계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는데 조사대상단위는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패널의 표본추출단위(Sampling Unit)는 성, 연령, 지역이었음.

〈표 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를 사용하였으며 40대가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이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였음.
- 식품패널은 총 1,115명이 선정되었음.

다. 조사실시

-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표 3>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되었음.

<표 3>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제주도 포함)	200명	식품패널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조사	10월 4일~8일
본조사	전국 (제주도 포함)	1,115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11월 18일~23일

라. 설문지 개발

- 7개 조사영역의 총 21개 조사항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안전체감도 등 조사는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음.

마. 주요 조사결과

- 설문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였음
-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71이고 각 평가영역별로도 0.6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가 검증되었음.

<표 4>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조사영역별 Cronbach's α 계수 값
제조·유통식품 안전	0.71	0.65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0.71
단체급식 안전		0.68
외식 안전		0.68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0.69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63

□ <표 5>에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와 각 주요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음.

○ 2013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나타남

○ 식품안전 분야별로 보면 제조·유통식품 안전이 79.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에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은 43.0%로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표 5>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2.1	25.8	54.0	17.2	1.0	72.2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의 안전	100.0	11.1	45.9	34.2	8.4	0.4	43.0
수입식품 안전	100.0	7.8	39.3	42.4	9.7	0.9	52.9
단체급식 안전	100.0	2.4	24.3	46.4	25.8	1.2	73.4
외식 안전	100.0	2.6	23.0	58.0	16.1	0.4	74.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00.0	1.4	19.2	54.0	24.6	0.9	79.4

□ <표 6>에는 올해 실시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와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 조사에서 수행된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체계 및 조사결과가 비교되어있음.

〈표 6〉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와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비교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구분	2013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체감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개인 ○ 조사대상: 17,424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약 37,000명)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개인 ○ 조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패널, 만 20세 이상 성인 (1,1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 (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의 「전화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일부 노령층에 한해 「면접조사」 방법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안전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안전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 전반적인 식품안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 수입식품 안전 ○ 단체급식 안전 ○ 외식 안전 ○ 제조·유통식품 안전 ○ 전반적인 식품안전 ○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도 ○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도 ○ 불량식품 근절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이상 안전 응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안전: 45.3%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안전: 72.9%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52.0% - 전반적인 식품안전: 66.6%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이상 안전 응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의 안전: 43.0% - 수입식품 안전: 52.9% - 단체급식 안전: 73.4% - 외식 안전: 74.5% -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79.4% - 전반적인 식품안전: 72.2%

□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승인통계는 총 915 종으로 정부 기관당 평균 8.4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전체 국가승인통계 중 사회분야 통계는 전체의 31.1%인 185종이며 이중 조사 통계는 65.5%임. 사회통계 중 보건 분야는 46종인데 식품안전 통계는 1건도 없음.

3. 결론 및 시사점

- 식품패널 대상 조사성공률이 83.2%로 총 조사 성공자는 928명으로 패널조사로 써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향후 식품패널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겠음.
- 올해 사용되었던 조사체계(표본설계 포함)에 대한 검토와 확정이 2014년 조사 실시 전에 반드시 필요함.
 - 우선 원표본에 대한 재검토와 패널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파악하여 활용여부를 진단하고 조사방법을 확정하여 통계청이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연결시켜야 할 것임
 - 명년에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별하여 조사가 실시되어야겠음.
 - 조사는 사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설계하고 각 조사는 적절한 시간을 갖고 실시되어야 각 조사별 미비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내년부터 1년에 2회씩 조사가 실시됨으로 조사결과의 원자료(raw data)를 DB화하여 매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체감지수를 생산하는 변수별 표준화 계수도 계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체감지수를 생산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 조사라서인지 공무원 직업 계층의 응답이 다른 조사계층과는 차별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개별층화하여 조사해봄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객관적인 전문가층을 개별층화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품안전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이유는 정부단속 미흡, 해당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실제 경험 등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식품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및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남자, 20대,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 등의 조사대상계층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여자, 30대, 500만원 이상 및 고학력층 조사대상계층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용어: 식품안전체감도, 패널조사, 조사설계, 표본설계, 국가통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사회약 선정 및 근절에 국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 사회약에는 3대 폭력 근절과 더불어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어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약처를 설치하여 식품안전의 총괄기구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식약처는 부처내에 불량식품근절단을 설치하여 연구 및 사업추진을 수행,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해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여 매년 연말에 발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등 사정당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단속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소통의 사회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강조되고 있지만 식품안전분야에서의 소통 강화는 더욱 필요하다. 타 분야와 달리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문가와 소비자간에 이해의 간극(gap)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반면에 소비자는 경험적, 감성적인 측면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으로 이런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²⁾.

이런 배경하에 정부는 최근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인 사실의 제공 및 정부와 소비자간 소통의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소통협력과를 설치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의한 촛불시위는 식품안전분야가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처럼

2) 정기혜 등, 식품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선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타 분야보다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 소비자의 인식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식품안전분야가 질병, 전쟁, 교통사고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Social Risk)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불안감 큰 분야로 조사되고 있고 사회위험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위험사회(Risk Society)가 됨을 감안할 때 안전한 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식품안전분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국민의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소비자 인식의 파악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것이다.

영국, 일본 등은 이런 중요성에 입각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매년 조사되는 기본적인 부분과 해마다 변경되는 정책현안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2012년 국무조정실이 연구위탁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설계된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구축 한 바 있다³⁾.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타 분야에서 기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패널조사(Panel survey)를 계획하였다. 즉, 횡단면적인 조사(Cross-sectional survey)를 지양하고 예산 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한 종단면적 조사(Longitudinal survey)를 1,000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실시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기재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는 자체 패널을 구축하여 필요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근거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형화된 조사체계에 의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그 활용도가 전 부처에 걸쳐 확대될 것이고, 또한 매년 실시되는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집행, 연구 등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짓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는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통계 조사의 안전분야에 속해 있었는데 특성상 식품안전부처에서 생산하기로 결정되어 2014년 조사부터는 사회통계 조사에서 제외된다. 즉, 이 업무를 통계청이 아닌 식품관련 부처가 맡아야 되는데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국무조정실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매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바, 식품안전

3) 정기혜 등,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국무총리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체감도 조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유일한 인식조사로 국가 승인통계의 성격을 갖는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2013년 조사가 첫해이자 1회 조사라 시범조사 성격이 있지만 명년에는 봄, 가을로 2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식품패널도 제대로 설계되어 완벽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은 우리나라 국가 승인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은 표본설계를 포함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결과가 분석되어있다. 제4장은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3. 연구목적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4대 사회악에 포함시켜 식품안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안심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은 식품정책 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매년 소비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학적인 표본추출 등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둘째,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설문지(Questionnaire) 개발

셋째, 설문지의 신뢰도 측정 등을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넷째,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실시

다섯째, 2013년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여섯째, 정형화된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확정 등 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및 분석

- 1) 식약처, 농식품부 등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자료가 분석되었다.
- 2) 조사설계, 방법 등에 대한 기존 문헌 등이 고찰되었다.
- 3) 외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현황이 파악되었다.
- 4) 최근 식품안전분야의 주요 정책개발 및 집행 현황이 분석되었다.

2. 설문지(Questionnaire) 개발

- 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 2) 주요 안전체감도와 그 원인 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3)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항목과 해마다 내용을 달리하여 조사하는 부가조사항목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 4) 영국, 일본 등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지가 참고로 활용되었다.

3. 조사설계

- 1) 시계열 분석 및 조사결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를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 2) 매년 2회씩 조사 실시 및 연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체계로 설계되었다.
- 3) 식품안전체감도를 국가승인통계화하기 위한 틀로 설계되었다.
- 4) 매년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틀로 설계되었다.

4. 표본 설계

- 1) 모집단은 2012년 통계청이 전국의 성인을 추계한 인구추계치로 하였다.
- 2) 2012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바탕으로 확률층화추출법에 의해 1,000명의 패널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 3) 표본추출 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하였다.
- 4) 조사 성공률을 감안하여 총 1,200명의 패널이 추출되었다.

5.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1) 평가표의 통계학적 검증 및 수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 2) Cronbach's alpha 값(0~1)에 의해 설문지, 설문항목의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하인 설문항목을 제외시키는 등 보완하였다.
- 3) 설문지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6. 본조사 실시

- 1)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 2) 식품패널이 조사대상자로 활용되었다.
- 3) 최종 조사대상자는 식품패널 1,000명이 목표치였다.

7.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 1) 최종 확정된 설문지에 의한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였다.
- 2) 총괄 및 세부분석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8. 매년 효율적 조사를 위한 정책제언

- 1) 매년 실시할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조사체계를 수립하였다.
- 2) 식품안전 체감도를 식품안전체감지수화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방법

가. 조사 설계

- 1)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결과 발표 일자 등을 설계하였다.
- 2) 통계학적 분석방법도 제시되었다.

나. 표본설계 및 추출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즉,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이며, 패널은 1,200명을 구축하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삼았다.

<표 1-1>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 표본 추출의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 3)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었고,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를 포함시켰다.

다. 설문지 개발

- 1) 설문지는 2013년부터 매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2) 설문지는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관심도, 인지도, 체감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 3)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 산출을 위해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라. 사전조사 실시

- 1) 사전조사는 기 개발된 평가도구 수정, 보완 및 본조사시 유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2) 조사대상자는 200명이었다.
- 3)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이 실시되었는데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5) 조사 기간은 2013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표 1-2〉 조사설계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제주도 포함)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10월 4일~8일
본조사	전국 (제주도 포함)	1,115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11월 18일~23일

마. 본조사 실시

- 1) 본조사 실시 목적은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전체, 수입식품, 단체급식 및 외식, 제조가공식품, 학교앞 판매식품 안전)를 산출함에 있었다.
- 2) 조사대상은 구축된 1,115명의 식품패널이었다.
- 3) 평가도구는 기 개발된 설문지로 리커르트 척도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전조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검증이 된 설문지였다.
- 4) 조사방법은 전화 조사와 직접 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5)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첫날 오전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회의 개최

- 1) 연구방향성 결정 및 연구 추진 과정상 Brain Storming을 위한 담당부처, 연구진, 해당 업종 단체 대표자간 정례적인 정책간담회의가 개최되었다.
- 2) 설문지 구성 등에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3) 착수보고회, 평가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통계분석

- 1)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4.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하였다.

- 2) 조사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성, 연령, 지역, 학력별, 직업별 등 독립변수별 조사문항간 식품안전정책 관심도, 인식도, 체감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조사의 신뢰성 분석

- 1)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에 의하여 인식도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표 구성시 조사항목의 스케일은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을 위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토록 하였다.
- 2)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았다.

$$\alpha = \frac{N}{(N-1)} \left(1 - \sum \frac{\sigma_i^2}{\sigma_t^2} \right)$$

N =문항 수, σ_t^2 =총분산 σ_i^2 =각 문항의 분산

- 3) 계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설문문항이 가지는 신뢰도의 하한값이라 볼 수 있었다. 조사 전체의 신뢰도 및 각 문항별 신뢰도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 수정,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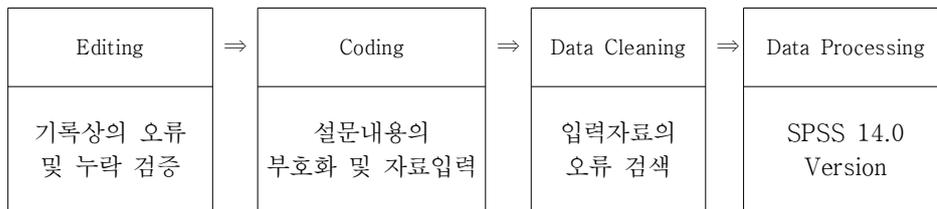
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1)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귀무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통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 2)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p value는 주로 95%내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3) 모든 조사결과의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p value는 주로 95%내에서 신뢰도를 검증하나 99%내의 신뢰도도 제시되었다.

라. 자료 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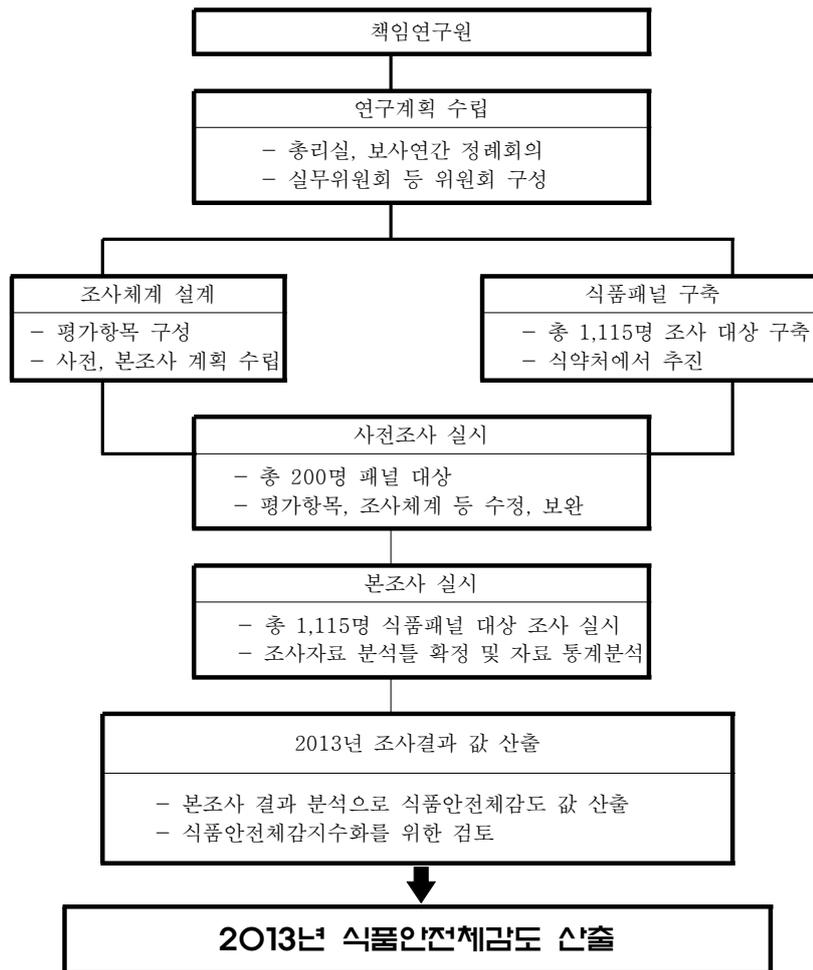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조사, 본조사를 통해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는 것이며, 완벽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2장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제2절 사회분야 국가통계 현황

제3절 향후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제4절 시사점

2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및 향후 < 발전방향 <

제1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현황

1. 기관별 현황

우리나라는 <표 2-1>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총 387개의 통계작성기관이 915종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당 평균 작성통계는 중앙행정기관 8.4개, 지방자치단체 1.6개로 나타났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라고 하며, 승인 없이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것은 통계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표 2-1> 국가통계 작성현황(기관별)

(단위: 종, %)

기관	작성 기관수	작성통계수 ()는 평균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387	915(2.4)	94	821	401	443	71	
정부기관	전체	302	75	677	301	399	52	
	중앙행정기관	전체	41	58	285	177	140	26
		통계청	1	41	17	43	2	13
		이외기관	40	17	264	134	138	13
지방자치단체	261	409(1.6)	17	392	124	259	26	
지정기관	85	163(1.9)	19	144	100	44	19	

주: 2013년 9월 1일 현재, 통계청
자료: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2013.

2.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 보면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통계가 전체의 31.3%(조사통계 65.5%), 경제통계는 40.9%(조사통계 56.6%)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분야에서는 보건·복지·사회분야의 작성 통계수가 185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국가통계 작성현황(분야별)

(단위: 종, %)

구분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915	100.0	94	821	401	443	71
사회분야	인구	28	3.1	3	25	4	21	3
	보건·사회·복지	185	20.2	7	178	138	44	3
	교육·문화·과학	48	5.2	3	45	35	12	1
	환경	26	2.8	1	25	11	14	1
경제분야	고용·임금	37	4.0	7	30	30	6	1
	물가·가계소비	18	2.0	10	8	16	2	-
	농림·수산	53	5.8	9	44	33	17	3
	광공업·에너지	32	3.5	3	29	21	8	3
	건설·주택·토지	38	4.2	1	37	14	19	5
	교통·정보통신	48	5.2	4	44	23	22	3
	도소매·서비스	17	1.9	8	9	15	2	-
	경기·기업경영	82	9.0	27	55	56	4	22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3	5	16	-	-	21
	재정·금융	17	1.9	1	16	2	15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1	3	7	1	4	5
	기타	255	27.9	2	253	2	253	-

주: 2013년 9월 현재, 통계청.
 자료: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2013.

제2절 사회분야 국가통계 현황

<표 2-3>에는 사회분야별 주요 국가 승인통계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사회분야 국가 승인통계는 총 287종으로 이중 식품안전이 포함될 수 있는 보건·복지·사회분야의 작성 통계수는 185종으로 전체의 20.2%이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까지 식품안전이 포함되어있던 보건분야는 전체의 4.7%인 총 46종의 통계가 있으며 식품안전 통계는 4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3> 사회 관련 분야별 주요 승인통계

분야	주요통계	비고
가계소득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9종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패널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9종	
과학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감시통계(기상청) 등 9종	
교육	-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조사(통계청), 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부) 등 14종	
문화	- 국민여가활동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등 25종	
보건	-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자살실태조사(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통계청) 등 46종	
복지	- 장애인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가정폭력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등 34종	
사회	- 사회조사(통계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연재해현황(소방방재청) 등 112종*	
인구	-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주민등록인구현황(안전행정부) 등 28종	
임금	- 임금결정현황조사(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직종별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등 8종	*
환경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환경부),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한국환경공단) 등 26종	

주: 지역 사회조사(서울시도시정책지표조사, 부산광역시사회조사 등 84종) 포함.
 자료: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2013.

식품안전 인식에 관한 승인통계는 2년 주기로 5개 분야씩 조사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안전분야에서 제외되어 2014년부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서는 미생산될 예정이다라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국가통계화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추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패널조사를 추진함은 식품안전분야도 타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시계열적 분석 등이 가능하고, 또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제3절 향후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표 2-4>에는 국가통계위원회가 확정된 향후 5개년 동안 각 분야별 주요 통계 개발 및 개선과제가 정리되어있다.

향후 5년간('13~'17) 범 정부차원의 통계수요에 부응하여 103종의 통계를 개발, 개선하는 국가계획이 수립되었다. 개발통계가 48건, 개선통계가 5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식품안전에 관련된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 분야별 주요 통계 개발 및 개선 과제

분야	내용	분야	내용
인구·주택	귀촌인, 주택보유,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장래인구 추계 등 4종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자살관련실태조사, 약국의 판매 의약품현황 등 총 11종
경제	소프트웨어산업, 중소기업전산업 생산지수, 제조업 제품공급동향 지수 등 13종	여성·가족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조사, 국제결혼실태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 15종
문화·체육	왜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저작권산업조사, 생활시간조사 등 총 5종	국토·해양	지적통계,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해양관측통계 등 9종
교육·고용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조사, 근로실태종합조사 등 15종	환경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통계, 물산업 통계조사, 환경경제계정 등 총 19종
행정·법무·국방	출입국자통계, 국방통계지표, 국제통계개선, 공공조달통계 등 7종	지역	지역별 사회조사, 지역내 총생산, 한옥통계 개발 등 5종

자료: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2013.

<표 2-5>에는 2013년부터 향후 5개년 각 부처별 통계 개발 및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부처별 과제가 제시되어있다.

각 분야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개발, 개선을 최우선 추진목적으로 수집, 정리되었다. 총 103건의 국가통계가 개발 및 개선할 예정에 있고,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15건, 통계청이 14건, 보건복지부가 10건 등의 순서로 계획이 많았다.

<표 2-5> 향후 5개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2013	1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개발
2013	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개발
2013	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개선
2013	4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개발
2013	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개발
2013	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2013	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개선 지원	개발
2013	8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개선
2013	9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방법론	개선
2013	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개선
2013	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개선
2013	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개선
2013	13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개선
2013	14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개발
2013	1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	개선
2013	16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개선
2013	1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개발
2013	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선
2013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2013	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선

34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2013	2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개선
2013	22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개선
2013	23	국방부	행정관리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개발
2013	24	안전행정부	제정정책과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개발
2013	25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개발
2013	26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지구 지정 현황	개발
2013	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개선
2013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개선
2013	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개선
2013	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개발
2013	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조사	개선
2013	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개발
2013	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개발
2013	3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의 판매 의약품 현황	개발
2013	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개발
2013	3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개발
2013	3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개발
2013	38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2013	39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선
2013	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2013	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개선
2013	4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	개발
2013	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개발
2013	44	환경부	수도정책과	물산업 통계조사	개발
2013	4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2013	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개발
2013	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개발
2013	48	환경부	자연자원과	지질공원 현황	개발
2013	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선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2013	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개선
2013	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개선
2013	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개선
2013	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개선
2013	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이동 실태조사	개발
2013	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개발
2013	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개선
2013	5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개선
2013	5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발
2013	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개선
2013	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개선
2013	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선
2013	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선
2013	6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 실태조사	개발
2013	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개선
2013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개발
2013	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개선
2013	6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 실태조사	개선
2013	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
2013	6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
2013	7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수요조사	개발
2013	7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개발
2013	7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개발
2013	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2013	7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개선
2013	7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도서통계 작성 및 관리)	개선
2013	76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통계 구축	개발
2013	7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개선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유형
2013	7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개선
2013	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개선
2013	8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개선
2013	8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면적	개발
2013	8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개발
2013	8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개발
2013	84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개선
2013	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개선
2013	86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개선
2013	8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개발
2013	88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 실태조사	개선
2013	89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개발
2013	9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개발
2013	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개발
2013	92	산림청	숲길정책팀	숲길의 조성·관리	개발
2013	93	산림청	산사태방지구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발
2013	94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교육 실태조사	개발
2013	95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개선
2013	96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개발
2013	97	특허청	정보기획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개선
2013	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개발
2013	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개선
2013	100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개선
2013	101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귀촌조사	개선
2013	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실시	개선
2013	103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한옥통계	개발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사회1분과위원회 회의자료, 2013.

제4절 시사점

<표 2-6>에는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2013년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대한 결과 비교가 제시되어있다.

<표 2-6>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와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비교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구분	2013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체감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개인 ○ 조사대상: 17,424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약 37,000명)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개인 ○ 조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패널구축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및 「인터넛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자기기입 (응답자 기입)」 방법 병행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의 「전화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일부 노령층에 한해 「면접조사」 방법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안전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안전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 전반적인 식품안전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 수입식품 안전 ○ 단체급식 안전 ○ 외식 안전 ○ 제조·유통식품 안전 ○ 올해 전반적인 식품안전 ○ 전년 대비 올해 식품안전 체감도 ○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 예측 ○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도 ○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도 ○ 불량식품 근절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이상 안전 응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안전: 45.3% -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안전: 72.9% -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52.0% - 전반적인 식품안전: 66.6%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이상 안전 응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의 안전: 43.0% - 수입식품 안전: 52.9% - 단체급식 안전: 73.4% - 외식 안전: 74.5% -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79.4% - 전반적인 식품안전: 72.2%

식품안전인식에 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통계 10개분야중 안전분야에 속해 2년 주기로 조사되어 공포되었다. 하지만 2012년 사회조사 실시 후 기존의 4개 조사항목으로는 식품안전 인식에 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전문가 검토와 식품안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부처(식약청)에서 생산, 공포기로 한 바 있다.

기본조사항목이 통계청은 4개였는데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는 11개로 증가하여 좀 더 세부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향후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도 66.6%에서 72.2%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식약처 신설 등 여러 이유로 식품안전 인식에 관한 국가통계 생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2년에 국무조정실이 계획했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국정과제화하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조사를 하고, 12월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시계열적 결과 비교를 위해 패널조사로 설계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국가통계로 추진되고 있다.

식품안전분야의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계획이 1건도 없는 실정에서 이번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국가통계화는 사회조사에서 제외된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조사를 대신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통계청에서도 조사비용을 줄이는 노력으로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조사를 가능한 지양하고 인터넷에 의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부합되게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도 패널별로 가장 선호하고, 비용측면에서도 저렴하며, 조사성공률을 높힐 수 있는 조사방법을 선정하여 조사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2013년 조사계획

제3절 사전조사

제4절 시사점

3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



제1절 조사설계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를 실시하게 될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 현안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주체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된다. 조사주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연말에 1회 발표하게 되며, 조사 및 분석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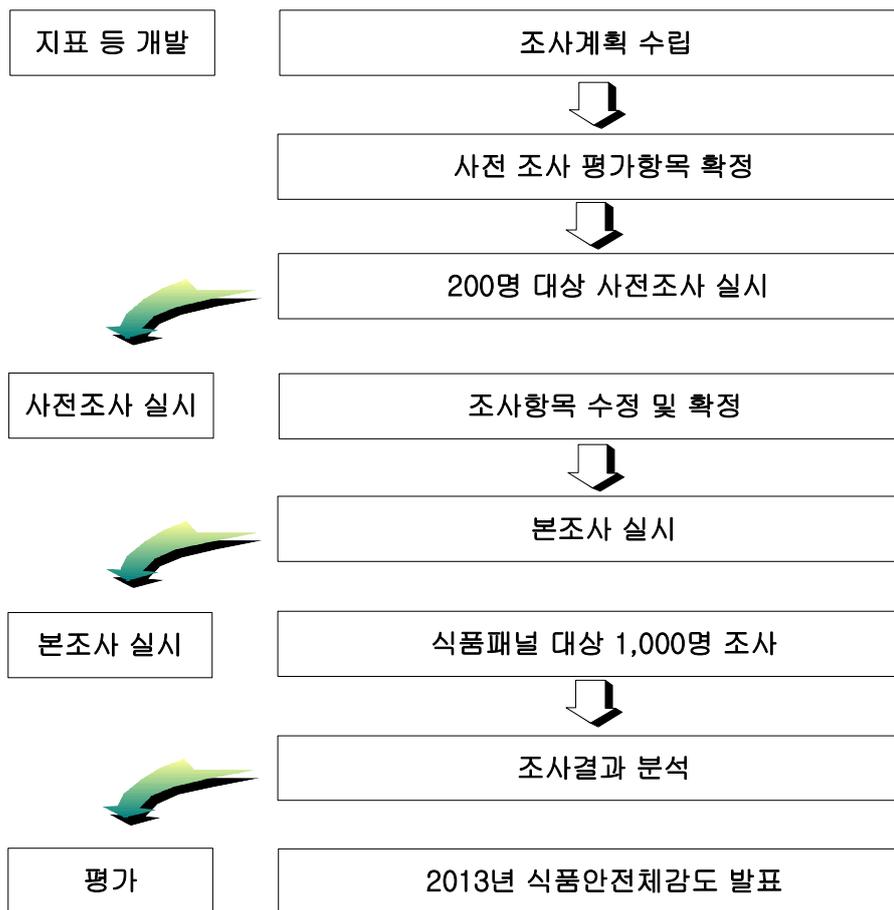
<표 3-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등 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1,200명	탈락률 등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결과발표	매년 12월	

가. 조사절차

이 연구의 전체 절차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표본설계를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설문지 개발, 사전조사, 본조사 실시 및 2013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산출한다.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1) 조사자료 에디팅(editing)

조사가 완료된 평가표를 오류 점검 및 수정하여 코딩할 수 있는 자료화한다.

2) 조사자료 코딩(coding)

에디팅이 된 조사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부호화 한다.

3) 조사자료 크리닝(cleaning)

조사자료의 코딩 후 입력된 자료의 오류 점검 및 수정으로 통계분석 전 마지막 조사자료 질관리를 한다.

4) 조사자료 프로세싱(processing)

조사자료를 에디팅, 크리닝한 후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나. 표본설계

1) 기본원칙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다.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이었다.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2) 모집단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성인 남녀인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치이다.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은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40대 인구수가 남, 녀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6,690,307	3,587,760	3,231,240	4,100,937	3,909,584	4,340,214	4,191,892	3,708,107	3,708,864	2,754,588	3,157,121
서울	7,715,005	787,703	808,662	885,118	866,717	823,430	834,599	731,849	794,267	564,237	618,423
부산	2,622,981	251,639	228,559	251,575	247,484	271,727	285,138	287,403	310,114	229,658	259,684
대구	1,823,926	180,792	155,466	184,114	188,664	215,182	222,105	188,454	194,497	134,716	159,936
인천	2,060,782	204,206	186,035	242,851	225,116	257,297	251,437	214,642	206,892	129,264	143,042
광주	1,079,629	113,823	110,321	122,924	122,886	127,866	127,302	98,786	100,730	72,464	82,527
대전	1,121,627	129,013	115,495	124,267	124,100	130,576	130,018	109,381	108,554	71,306	78,917
울산	811,368	76,460	58,177	97,344	88,980	110,014	105,452	91,268	84,077	49,338	50,258
경기	8,664,116	829,101	758,288	1,065,844	1,020,512	1,134,173	1,074,551	845,958	803,657	529,771	602,261
강원	1,085,284	110,223	80,232	101,726	96,299	124,289	115,241	122,206	118,862	99,446	116,760
충북	1,109,778	113,225	93,826	116,991	108,132	130,469	121,325	117,662	112,376	90,541	105,231
충남	1,511,901	157,553	133,018	172,855	146,115	176,241	151,338	150,145	140,444	131,767	152,425
전북	1,261,737	118,080	99,069	120,787	117,092	141,909	134,866	129,761	130,949	121,807	147,417
전남	1,213,303	91,250	70,722	111,953	102,863	142,583	126,245	131,885	128,415	138,180	169,207
경북	1,903,052	182,543	143,694	190,608	173,974	213,345	197,468	202,746	200,700	180,153	217,821
경남	2,321,269	209,027	160,463	269,980	240,615	291,039	268,493	247,472	237,076	180,054	217,050
제주	384,549	33,122	29,213	42,000	40,035	50,074	46,314	38,489	37,254	31,886	36,162

3) 표본 추출

<표 3-4>에는 연령별, 지역별로 구성된 식품패널이 분포되어있다. 분석시 대상자 수가 적은 지역은 권역으로 묶어 오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 3-4〉 식품패널

	남자						여자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합계	100	105	109	102	88	504	91	101	107	102	95	496	1,000
서울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63	126
부산	7	7	8	8	7	37	7	7	8	8	7	37	74
대구	6	6	7	6	5	30	6	6	7	6	6	31	61
인천	6	7	7	7	5	32	6	7	7	7	5	32	64
광주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대전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울산	4	4	5	4	3	20	3	4	5	4	3	19	39
경기	13	15	15	13	10	66	12	14	15	13	11	65	131
강원	5	5	5	5	5	25	4	4	5	5	5	23	48
충북	5	5	5	5	4	24	4	5	5	5	5	24	48
충남	6	6	6	6	5	29	5	5	6	5	6	27	56
전북	5	5	5	5	5	25	4	5	5	5	5	24	49
전남	4	5	5	5	5	24	4	5	5	5	6	25	49
경북	6	6	7	6	6	31	5	6	6	6	7	30	61
경남	7	7	8	7	6	35	6	7	7	7	7	34	69
제주	3	3	3	3	3	15	2	3	3	3	3	14	29

<표 3-5>에는 표본설계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정리되어있다.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전국의 20세이상 국민(통계청 추계인구)을 대상으로 층화계통추출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 : 95% ± 3% - 표본규모 : 성인 1,000명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2012년 통계청 인구추계치를 모집단으로 하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하여 등확률로 표본선정 - 층내에서 계통추출 -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 - 세종시는 모집단 미과약으로 제외
표본배정방식	-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단 크기에 근거하여 1/38,418의 확률로 각 셀별로 표본 할당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hat{p}_{st} = \sum_{r=1}^{16} \sum_{s=1}^2 \sum_{a=1}^5 w_{rsa} \hat{p}_{rsa}$ <p>r : 16개 지역, s : 1,2(남,여), a : 20대, ...,60대이상</p> <p>w_{rsa}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의 가중치</p> $\hat{V}ar(\hat{p}_{st}) = \sum_r \sum_s \sum_a w_{rsa}^2 \hat{V}ar(\hat{p}_{rsa})$ <p>여기에서</p> $\hat{V}ar(\hat{p}_{rsa}) = \frac{N_{rsa} - n_{rsa}}{N_{rsa}} \frac{\hat{p}_{rsa}(1 - \hat{p}_{rsa})}{n_{rsa} - 1}$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전년 대비, 올해, 내년의 3종으로 구성 - 식품안전체감도는 5개 세부영역으로 구분 (수입식품, 외식, 단체급식, 학교주변 식품, 제조가공식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의 총 Sample 수는 1,000표본이고, Final Sampling Unit 1단위 (명)에 대한 Sampling Fraction(표본추출확률)은 $\frac{1}{38,418}$ (단위:명)

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 전체 List(Sampling Frame)를 확보하여 일정한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 Random하게 복원 추출(With replacement)하는 단순무작위추출(SRS : Simple Random Sampling)을 할 경우 모집단의 수가 전 국민이 되고,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 할 때 불가능함에 따라 이 연구의 최종적인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연령·지역이라 가정하고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추출은 조사원에게 주어진 표본할당의 70%를 Birthday Method 방식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30%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과소 표집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할당 추출을 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어있으며,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1,000명의 패널을 지역, 성, 연령별 각 셀별로 분포시키다 보니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령대별 일부 계층군은 표본 수가 적어 발생 오차율이 10%p 이상 발생하는 계층이 있어 향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시 지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묶어 자료분석 및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지역	목표 허용오차	연령	목표 허용오차
경기(최소)	±8.5%p	40대(최소)	±6.7%p
제주(최대)	±18.5%p	60대~(최대)	±7.2%p

제2절 2013년 조사계획

1. 조사계획 개요

<표 3-7>에는 사전조사, 본조사 등 이 연구의 조사계획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사전조사는 200명, 본조사는 1,000명을 조사 완료할 목표이며, 조사방법은 패널조사의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화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이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여러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조사의 경우에 고연령층이나 일부 층이 인터넷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고, 기본조사 항목과 부가조사 항목이 비교적 단순하며, 특히 조사일정이 짧고, 그리고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주로 전화조사 방법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 개인단위의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찾을 목적과 일부 고연령층의 조사 참여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계획되었다.

<표 3-7>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일	비고
사전조사	200명	전화조사	10월 4일~8일	
본조사	1,000명	전화, 면접조사	11월 18일~23일	

2. 설문지 개발

<표 3-8>에는 사전조사에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설문지 내용 분야, 영역 등 별로 구분되어있고,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설문지는 7개 평가분야, 9개 평가영역, 2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 일반사항으로는 표본추출 단위인 성, 연령, 지역에 학력, 소득액, 직업이 추가되었다.

사전조사 후 평가영역별 Cronbach's alpha 계수 값 산출로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 등 개선하였다.

〈표 3-8〉 설문지 구성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항목	
1. 식품 안전 인식도 및 관심도	1.1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1.1.1 환경문제	
		1.1.2 자연재해	
		1.1.3 식품안전	
		1.1.4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1.1.5 범죄	
		1.1.6 전쟁, 테러	
		1.1.7 교통사고	
	1.2 인지도 및 관심도	1.2.1 식품안전 영향 요인	
		1.3.1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4.1 식품안전정책 관심 정도	
		1.5.1 식품 정보 습득 이용 매체	
		1.6.1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2. 제조·유통식품 안전	2.1.1 제조·유통식품 안전정도
		3.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3.1.1 학교 주변 판매 식품 안전정도
3.1.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 단체 급식과 외식 안전	4.1 단체급식 안전	4.1.1 단체 급식 안전정도	
		4.1.2 단체 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2 외식 안전	4.2.1 외식 안전정도	
		4.2.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 수입식품 안전	5.1.1 수입식품 안전정도		
	5.1.2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 식품안전	6.1.1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6.1.2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6.1.3 올해 식품안전관리수준		
	6.1.4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7. 응답자 인적사항	7.1.1 성별		
	7.1.2 연령		
	7.1.3 거주지		
	7.1.4 월평균 가구소득		
	7.1.5 응답자 최종학력		
	7.1.6 응답자 직업		

제3절 사전조사

1. 조사 개요

<표 3-9>에는 사전조사 실시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을 모집단으로 254명을 식품패널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지역, 성, 연령별 등확률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4명중 46명이 조사거부, 대상자 중복, 조사도중 거부 등에 의해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총 분석대상자 수는 207명으로 나타났고, 5일간 전화조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사전조사의 목적은 개발된 설문지의 통계학적 신뢰도 검증 및 설문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을 도출함에 있었다.

<표 3-9>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식약처 시민감시단
표본선정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16개 지자체) 설계된 식품패널 1,000명의 조사설계에 근거하여 등확률로 선정
조사기간	2013년 10월 2일 ~ 8일
조사방법	전화조사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조사도구	리커트 5단계 척도로 개발된 설문지로 7개 영역, 25개 문항 및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6문항
조사대상	총 254명
조사완료	총 207명
탈락사유	거부 및 연락불능 : 45명 중복 : 1명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pm 2.5\%$ Point
점수환산방법	인지도, 관심도, 체감도별 5단계 점수부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조사대상자 구성

사전조사 대상자 216명은 <표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 연령, 지역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표 3-10> 사전조사대상 성, 연령, 지역별 표본 선정 현황

	남자						여자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총계	21	23	24	22	18	108	21	23	23	23	18	108	216
서울	3	4	4	4	2	17	3	4	4	4	2	17	34
부산	1	1	1	1	1	5	1	1	1	2	1	6	11
대구	1	1	1	1	1	5	1	1	1	1	1	5	10
인천	1	1	1	1	1	5	1	1	1	1	1	5	10
광주	1	1	1	1	1	5	1	1	1	1	1	5	10
대전	1	1	1	1	1	5	1	1	1	1	1	5	10
울산	1	1	1	1	1	5	1	1	1	1	1	5	10
경기	4	5	5	4	2	20	4	5	5	4	2	20	40
강원	1	1	1	1	1	5	1	1	1	1	1	5	10
충북	1	1	1	1	1	5	1	1	1	1	1	5	10
충남	1	1	1	1	1	5	1	1	1	1	1	5	10
전북	1	1	1	1	1	5	1	1	1	1	1	5	10
전남	1	1	1	1	1	5	1	1	1	1	1	5	10
경북	1	1	1	1	1	5	1	1	1	1	1	5	10
경남	1	1	2	1	1	6	1	1	1	1	1	5	11
제주	1	1	1	1	1	5	1	1	1	1	1	5	10

3. 조사결과

가.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조사문항들이 동질적인 경우 조사자들이 각 문항에 얼마나 일관성있게 반응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조사자들이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토대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파악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통상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6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총 6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0.71로 바람직한 수준이며, 각 문항별 Cronbach's alpha 값도 0.6 이상이라 설문지의 신뢰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lpha = \frac{N}{(N-1)} \left(1 - \sum \frac{\sigma_i^2}{\sigma^2} \right)$$

N=문항 수, σ^2 =총분산 σ_i^2 =각 문항의 분산

조사대상자수와 조사문항수가 증가하면 Cronbach's α 값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표 3-11〉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조사영역별 Cronbach's α 계수 값
제조·유통식품 안전	0.71	0.65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0.71
단체급식 안전		0.68
외식 안전		0.68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0.69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63

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3-12>에 제시되어있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은 당초 식품패널 표본설계에 의해 등확률로 구성되었으므로 각 특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

〈표 3-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명, %)

구분		대상자수	구성비율
합계		207	100.0
성별	남성	102	49.3
	여성	105	50.7
연령군별	10대	1	0.5
	20대	38	18.4
	30대	43	20.8
	40대	50	24.2
	50대	46	22.2
	60대 이상	29	14.0
지역별	서울	34	16.4
	부산	10	4.8
	대구	12	5.8
	인천	10	4.8
	광주	7	3.4
	대전	9	4.4
	울산	10	4.8
	경기	38	18.4
	강원	10	4.8
	충북	11	5.3
	충남	9	4.4
	전북	10	4.8
	전남	10	4.8
	경북	6	2.9
	경남	11	5.3
	제주	10	4.8

<표 3-13>에는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 직업에 대한 특성이 분석되어 있다.

<표 3-1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명%)

	구분	대상자수	구성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	4.4
	100~200만원	17	8.2
	200~300만원	45	21.7
	300~400만원	54	26.1
	400~500만원	36	17.4
	500만원 이상	46	22.2
최종 학력	초등졸	2	1.0
	중등졸	3	1.5
	고등졸	58	28.0
	초대졸	38	18.4
	대졸 이상	106	51.2
직업	자영업	29	14.0
	판매·서비스직	7	3.4
	기능직	4	1.9
	사무·기술직	30	14.5
	사무·관리직	24	11.6
	전문·자유직	25	12.1
	주부	51	24.6
	학생	22	10.6
	무직	11	5.3
	공무원	4	1.9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소득액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수준의 조사대상자로 구성되었고, 학력도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 전체의 97.5%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학력 수준이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⁴⁾.

다. 총괄 현황

설문지는 5점 척도로 개발되었고, <표 3-14>에는 각 조사항목별 5점 척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2013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72.9%로 작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인 65%보다 높게 나타났고, 분야별로 보면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정도가 38.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이 46.9%로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단체급식 안전에 대한 조사결과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5개 평가분야 중 식품전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단체급식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96.2%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불량식품 근절 노력 인지도도 86.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 각 분야별 안전체감도 비율

(단위: %)

구분	세부항목	보통 이상 응답 비율
인지도	정부 불량식품근절 노력 인지도	86.9
관심도	정부 식품안전정책 관심정도	96.2
세부 안전도	제조·유통식품 안전	63.7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38.6
	단체급식 안전	77.8
	외식 안전	59.5
	수입식품 안전	46.9
전체 안전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72.9

4)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민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전인구의 19%, 고등학교가 41%, 고등교육 이상이 40% 수준임.

제4절 시사점

가. 설문지 수정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본조사에 사용될 설문지로 수정하였고, 확정된 설문지는 <표 3-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5> 수정된 본조사용 조사표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항목
기본조사	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2. 작년 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3.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의 내년 예측
	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4.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수준 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불안 이유
	3. 수입식품의 안전	5. 수입식품의 안전 수준 5-1. 수입식품의 불안 이유
	4. 단체 급식의 안전	6. 단체급식 안전 질문 대상자 선정 6-1. 단체급식의 안전 수준 6-2. 단체급식의 불안 이유
	5. 외식의 안전	7. 외식의 안전 수준 7-1 외식의 불안 이유
	6. 제조/유통 식품의 안전	8. 제조/유통 식품의 안전 수준 8-1. 제조/유통 식품의 불안 이유
부가조사	7. 식품안전의 상대적인 안전 수준	9-1. 환경문제 9-2. 자연재해 9-3. 중증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9-4. 범죄 9-5. 전쟁, 테러 9-6. 식품안전 9-7. 교통사고
	8. 식품안전 인식도	10. 식품안전 영향 요인 11.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인지 수준 12.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9. 식품안전 관심도	13. 식품안전정책 관심 수준 14. 식품 정보 습득 이용 매체 15. 가장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10. 응답자 일반사항	16. 응답자 일반 사항 (패널 구축시 제공되는 정보 활용)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안전체감도와 그 이유를 조사하는 기본조사항목 선정
- 둘째, 기타 조사항목은 다른 그룹으로 묶어 부가조사항목으로 선정
- 셋째,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등 일부 포함되지 않은 조사항목 추가

나. 식품안전체감지수화

식품안전체감도를 국가 통계로 추진하고 또한 매년 조사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정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생산하는 소비심리지수 등 여러 국내외 지수를 참고하여 식품안전체감지수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체감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bigcirc \text{ 식품안전 체감지수} = (\text{인지도} + \text{관심도} + \text{전반적 안전체감도})/3$$

물론 사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체감도로 구분된 조사항목이 아직 미흡하고, 또한 각 분야별 가중치 및 편차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산된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심리지수는 지수의 표준화를 위해 약 10년간의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지수 범위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수는 지수 값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등 대비에 의한 증감을 분석함에 의미가 있으므로 활용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표 3-16>에는 사전조사 결과 산출된 식품안전 인지도, 관심도, 안전도와 가중치 적용을 하지 않은 체감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16〉 각 영역별 안전체감도 점수

구분	세부항목	평균 점수
총계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 값	76.3
인지도	정부 불량식품근절 노력 인지도	72.6
관심도	정부 식품안전정책 관심정도	83.5
전반적 안전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72.9



제4장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세부 조사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본조사 <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개요

<표 4-1>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 본조사 식품패널 구축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3년 11월 18일 ~ 11월 23일(전화조사), 11월 21일(면접조사)	
조사대상	1,115명	
조사내용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21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전화조사 : 1,084명 면접조사 : 31명	
탈락사유	총 187명	결번: 4명 본인 아님 : 6명 조사시간대 거부 : 3명 연결 안됨 : 93명 조사 거부 : 47명 목표 초과 : 34명
조사 성공자	총 928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1,115명의 명단을 제공 받아 사전조사를 통해 기 개선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 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3년 11월 15일(금)에 전화 조사원 16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었고,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개인대상 조사에서 면접조사의 실제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31명에 대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1,115명의 조사대상자 중 조사 불능인 187명을 제외한 928명에 대한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2.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목표

<표 4-2>에는 본조사 조사목표인 식품패널 1,000명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4-2> 본조사 대상 식품패널 현황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000	504	100	105	109	102	88	496	91	101	107	102	95
서울	126	63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부산	74	37	7	7	8	8	7	37	7	7	8	8	7
대구	61	30	6	6	7	6	5	31	6	6	7	6	6
인천	64	32	6	7	7	7	5	32	6	7	7	7	5
광주	48	24	5	5	5	5	4	24	5	5	5	5	4
대전	48	24	5	5	5	5	4	24	5	5	5	5	4
울산	39	20	4	4	5	4	3	19	3	4	5	4	3
경기	131	66	13	15	15	13	10	65	12	14	15	13	11
강원	48	25	5	5	5	5	5	23	4	4	5	5	5
충북	48	24	5	5	5	5	4	24	4	5	5	5	5
충남	56	29	6	6	6	6	5	27	5	5	6	5	6
전북	49	25	5	5	5	5	5	24	4	5	5	5	5
전남	49	24	4	5	5	5	5	25	4	5	5	5	6
경북	61	31	6	6	7	6	6	30	5	6	6	6	7
경남	69	35	7	7	8	7	6	34	6	7	7	7	7
제주	29	15	3	3	3	3	3	14	2	3	3	3	3

나. 조사 성공

<표 4-3>에는 조사 성공한 928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분포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3〉 본조사 조사성공 현황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28	482	93	101	107	99	82	446	83	97	97	95	74
서울	126	63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부산	71	37	7	7	8	8	7	34	7	7	8	7	5
대구	59	30	6	6	7	6	5	29	6	6	6	6	5
인천	62	31	6	6	7	7	5	31	6	6	7	7	5
광주	46	24	5	5	5	5	4	22	4	5	5	5	3
대전	45	22	5	5	5	3	4	23	4	5	5	5	4
울산	30	16	2	3	5	3	3	14	3	3	2	3	3
경기	130	66	13	15	15	13	10	64	12	14	15	13	10
강원	46	24	5	4	5	5	5	22	3	4	5	5	5
충북	45	22	4	5	5	5	3	23	4	5	4	5	5
충남	47	26	5	6	5	6	4	21	5	4	6	4	2
전북	42	24	5	5	5	5	4	18	3	5	5	5	0
전남	42	23	4	4	5	5	5	19	4	4	4	4	3
경북	50	25	4	6	6	6	3	25	3	6	4	6	6
경남	63	34	6	7	8	7	6	29	6	7	6	6	4
제주	24	15	3	3	3	3	3	9	0	3	2	1	3

다. 조사 거부 등

<표 4-4>에는 각 층별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72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4-4> 본조사 조사 거부 등 현황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72	22	7	4	2	3	6	50	8	4	10	7	21
서울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	3	0	0	0	0	0	0	3	0	0	0	1	2
대구	2	0	0	0	0	0	0	2	0	0	1	0	1
인천	2	1	0	1	0	0	0	1	0	1	0	0	0
광주	2	0	0	0	0	0	0	2	1	0	0	0	1
대전	3	2	0	0	0	2	0	1	1	0	0	0	0
울산	9	4	2	1	0	1	0	5	0	1	3	1	0
경기	1	0	0	0	0	0	0	1	0	0	0	0	1
강원	2	1	0	1	0	0	0	1	1	0	0	0	0
충북	3	2	1	0	0	0	1	1	0	0	1	0	0
충남	9	3	1	0	1	0	1	6	0	1	0	1	4
전북	7	1	0	0	0	0	1	6	1	0	0	0	5
전남	7	1	0	1	0	0	0	6	0	1	1	1	3
경북	11	6	2	0	1	0	3	5	2	0	2	0	1
경남	6	1	1	0	0	0	0	5	0	0	1	1	3
제주	5	0	0	0	0	0	0	5	2	0	1	2	0

총 1,000명의 목표 패널 중 72명을 조사 하지 못하여 총 조사 성공자는 928명으로 조사대상 1,115명 대비 조사성공률은 83.2%로 최종 분석되었다. 남자의 경우 20대 7명, 60대 이상이 6명 등 총 22명, 여자는 50명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이 총 11명, 울산과 충남이 각각 9명씩 조사 미실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5>에는 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있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명, %)

구분		전체	
		수	비율
최종 학력	중졸 이하	73	7.9
	고졸	320	34.5
	대졸 이상	535	57.7
직업	공무원	23	2.5
	기능직	40	4.3
	무직	65	7.0
	사무관리직	122	13.2
	사무기술직	234	25.2
	자영업	90	9.7
	전문자유직	49	5.3
	주부	178	19.2
	판매서비스직	55	5.9
	학생	72	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6	6.0
	100만원대	123	13.3
	200만원대	164	17.7
	300만원대	170	18.3
	400만원대	170	18.3
	500만원 이상	245	26.4

학력수준의 경우 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 학력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졸이 41%, 대졸이상이 40%인데 이번 패널은 90%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6>에 제시된 성, 연령,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012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추계치를 모집단으로 등확률로 분포시킨 것이므로 일반적 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6>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전체	
		응답수	비율
합계		928	100.0
성별	남성	482	51.9
	여성	446	48.1
연령군별	20대	176	19.0
	30대	198	21.3
	40대	204	22.0
	50대	194	20.9
	60대 이상	156	16.8
지역별	서울	126	13.6
	부산	71	7.7
	대구	59	6.4
	인천	62	6.7
	광주	46	5.0
	대전	45	4.8
	울산	30	3.2
	경기	130	14.0
	강원	46	5.0
	충북	45	4.8
	충남	47	5.1
	전북	42	4.5
	전남	42	4.5
	경북	50	5.4
	경남	63	6.8
	제주	24	2.6

2. 식품안전체감도

가. 2013년 안전 체감도

<표 4-7>에는 2013년 식품안전 전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28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조사되었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6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정부 출범이후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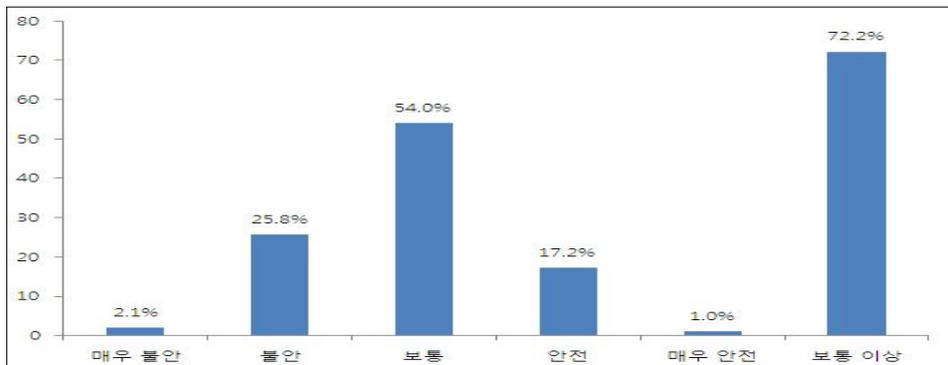
<표 4-7> 2013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체감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전반적 체감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응답 자수	928	19	239.0	501	160	9	670
		비율	100.0	2.1	25.8	54.0	17.2	1.0	72.2

[그림 4-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4-1] 2013년 식품안전관리



나. 작년대비 안전체감도

<표 4-8>에는 2013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0.1%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라 안전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와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소비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8>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함	나아졌음	크게 나아졌음	동일 이상
전반적 체감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응답 자수	928	11	81.0	547	283	6	836
		비율	100.0	1.2	8.7	58.9	30.5	0.7	90.1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예측

<표 4-9>에는 내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5.6%가 보통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할 것	나아짐	크게 나아짐	동일 이상
전반적 체감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응답 자수	928	7	34.0	438	420	29	887
		비율	100.0	0.8	3.7	47.2	45.3	3.1	95.6

3.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0>에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 수입식품안전, 단체급식과 외식안전, 제조유통 식품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2.2%인데 이보다 높게 조사된 분야는 79.4%의 제조·유통식품, 74.5%의 외식안전 체감도, 그리고 73.4%의 단체급식 안전 체감도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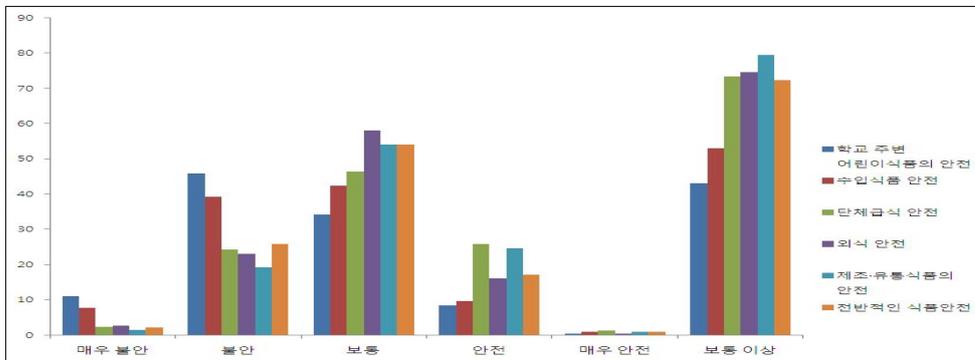
반면에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2.9%,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체감도는 4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두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적용, 홍보 등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10>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의 안전	100.0	11.1	45.9	34.2	8.4	0.4	43.0
수입식품 안전	100.0	7.8	39.3	42.4	9.7	0.9	52.9
단체급식 안전	100.0	2.4	24.3	46.4	25.8	1.2	73.4
외식 안전	100.0	2.6	23.0	58.0	16.1	0.4	74.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00.0	1.4	19.2	54.0	24.6	0.9	79.4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2.1	25.8	54.0	17.2	1.0	72.2

[그림 4-2]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4. 부가 조사 항목

2013년 식품패널 조사의 부가조사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대적 불안감

<표 4-11>에는 2013년 범죄, 식품안전, 교통사고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별 상대적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928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불안한 사회위험은 범죄로 나타났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는 52.3%로 범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내보이고 있다. 전쟁, 테러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미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범죄	928	100.0	16.8	48.6	22.2	11.4	1.0	65.4
식품안전	928	100.0	7.2	45.0	33.1	13.6	1.1	52.3
교통사고	928	100.0	6.7	39.3	42.9	10.7	0.4	46.0
환경문제	928	100.0	4.2	40.5	43.1	11.3	0.9	44.7
자연재해	928	100.0	3.5	38.7	40.0	17.2	0.7	42.1
중증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928	100.0	4.3	34.3	40.3	19.8	1.3	38.6
전쟁, 테러	928	100.0	4.6	25.7	42.0	25.5	2.2	30.3

나. 영향요인

<표 4-12>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2>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방송보도(뉴스, 방송프로그램 등)	614	66.2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30	14.0
주변사람의 의견	49	5.3
정부 보도자료	47	5.1
막연한 불안감	44	4.7
본인 및 친인척의 경험	44	4.7

방송 보도 등 언론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2%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그래도 전문가나 과학적 지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응답은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보였다.

다. 식품정책에 대한 관심

<표 4-13>에는 평소에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 갖는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자의 93.4%가 보통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 관심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보통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보통 이상
관심도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관심정도	응답 자수	928	13	48	299	409	159	867
		비율	100.0	1.4	5.2	32.2	44.1	17.1	93.4

라. 주요 정보 구득원

<표 4-14>에는 평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인터넷이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9.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다음은 거의 차이없이 조사대상자의 39.0%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방송매체가 인터넷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다른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식품패널이 인구에 비례하여 등확률로 선정되어 다른 조사와는 달리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14> 정보 구득 매체

(단위: %)

항목	응답수	비율
합계	1760	100.0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692	39.5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683	39.0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190	10.9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2	5.8
중앙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83	4.7

마. 유용한 식품정보

<표 4-15>에는 평소에 이용하시는 식품안전 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생활 정보가 전체의 28.8%,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정보가 24.1%, 식품안전 전문정보가 20.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위해식품 정보나 리콜 정보가 19.1%로 이러한 정보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식생활 정보	267	28.8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224	24.1
식품 안전 전문 정보 (연구자료, 교수·의사 인터뷰 등)	193	20.8
위해식품 정보나 회수(recall)정보	177	19.1
식품 기준 규격 및 법령 등	63	6.8
기타	4	0.4

바. 식품 현안

<표 4-16>에는 현재 해결이 필요한 우리나라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6〉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 현안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지자체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	353	38.0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선	250	26.9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 강화	182	19.6
식생활, 식품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81	8.7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부 정책의 홍보 강화	58	6.3
기타	4	0.4

소비자 인식조사시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정부의 감도 소홀이라는 맥락의 응답이 이 조사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지자체의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가 가장 필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0%로 최우선 순위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이 26.9%, 그리고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가 19.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내년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정부 계획으로 평가된다.

사.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4-17>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68.3%가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4-17>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이상
인지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응답자수	928	49	245	323	244	67	634
		비율	100.0	5.3	26.4	34.8	26.3	7.2	68.3

아. 불량식품 유통 사유

<표 4-1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의 51.1%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은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21.7%,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경제

적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를 지적인 비율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익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부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사결과이다.

〈표 4-1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약함	474	51.1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1	21.7
불량식품을 팔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큼	140	15.1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사회분위기	109	11.8
기타	4	0.4

제3절 세부 조사결과

1. 식품안전체감도

가. 2013년 안전체감도

<표 4-19>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변수별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0대, 공무원, 100만원대, 중졸이하, 중부권 거주 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권역별 차이는 매우 의미가 있고, 연령군별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직업중 공무원의 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표 4-19〉 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정도 비교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2.1	25.8	54.0	17.2	1.0	72.2	-
성별	남	2.3	20.5	53.3	22.2	1.7	77.2	0.0004 ***
	여	1.8	31.4	54.7	11.9	0.2	66.8	
연령군별	20대	1.1	22.7	55.7	19.9	0.6	76.1	0.0271*
	30대	4.0	32.8	50.5	12.6	0.0	63.1	
	40대	2.0	22.6	55.9	18.6	1.0	75.5	
	50대	0.0	27.3	52.6	18.6	1.6	72.7	
	60대 이상	3.2	22.4	55.8	16.7	1.9	74.4	
직업별	공무원	0.0	13.0	56.5	30.4	0.0	87.0	0.2573
	기능직	5.0	22.5	60.0	12.5	0.0	72.5	
	무직	0.0	21.5	56.9	18.5	3.1	78.5	
	사무관리직	3.3	26.2	45.9	23.0	1.6	70.5	
	사무기술직	0.9	27.8	54.3	16.7	0.4	71.4	
	자영업	4.4	24.4	55.6	13.3	2.2	71.1	
	전문자유직	2.0	18.4	51.0	28.6	0.0	79.6	
	주부	2.3	31.5	55.6	10.1	0.6	66.3	
	판매서비스직	1.8	29.1	52.7	16.4	0.0	69.1	
	학생	1.4	18.1	56.9	22.2	1.4	80.6	
소득별	100만원 미만	0.0	30.4	53.6	12.5	3.6	69.6	0.4501
	100만원대	4.9	19.5	55.3	19.5	0.8	75.6	
	200만원대	0.6	25.6	56.1	16.5	1.2	73.8	
	300만원대	3.5	30.0	55.9	10.6	0.0	66.5	
	400만원대	1.2	27.7	54.1	17.1	0.0	71.2	
	500만원 이상	1.6	23.7	50.6	22.5	1.6	74.7	
학력별	중졸이하	1.4	20.6	64.4	11.0	2.7	78.1	0.2950
	고졸	1.6	24.7	57.8	14.7	1.3	73.8	
	대졸이상	2.4	27.1	50.3	19.6	0.6	70.5	
권역별	수도권	2.5	31.5	47.8	17.6	0.6	66.0	0.0063 **
	중부권	0.6	19.7	57.9	20.2	1.6	79.8	
	호남권	2.0	22.1	59.1	15.6	1.3	76.0	
	영남권	2.6	25.3	55.7	15.8	0.7	72.2	

나.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0>에는 작년 대비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한 변수별 분석한 세부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0> 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비교

(단위: %)

구분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졌 음	크게 나아졌 음	동일 이상	P
합계		1.2	8.7	58.9	30.5	0.7	90.1	-
성별	남	0.4	9.1	56.4	33.4	0.6	90.5	0.0594
	여	2.0	8.3	61.7	27.4	0.7	89.7	
연령군별	20대	1.7	8.0	60.8	28.4	1.1	90.4	0.0121 *
	30대	1.5	14.7	62.6	21.2	0.0	83.8	
	40대	2.0	8.3	58.8	29.9	1.0	89.7	
	50대	0.0	6.2	56.7	36.1	1.0	93.8	
	60대 이상	0.6	5.8	55.1	38.5	0.0	93.6	
직업별	공무원	0.0	4.4	56.5	39.1	0.0	95.7	0.2674
	기능직	0.0	15.0	52.5	32.5	0.0	85.0	
	무직	0.0	10.8	55.4	33.9	0.0	89.2	
	사무관리직	1.6	7.4	64.8	25.4	0.8	91.0	
	사무기술직	1.7	11.1	59.0	28.2	0.0	87.2	
	자영업	0.0	12.2	50.0	36.7	1.1	87.8	
	전문자유직	2.0	2.0	49.0	42.9	4.1	95.9	
	주부	1.7	5.1	64.0	29.2	0.0	93.3	
	판매서비스직	1.8	9.1	60.0	27.3	1.8	89.1	
학생	0.0	8.3	61.1	29.2	1.4	91.7		
소득별	100만원 미만	1.8	10.7	50.0	35.7	1.8	87.5	0.7126
	100만원대	1.6	11.4	57.7	28.5	0.8	87.0	
	200만원대	0.0	9.8	55.5	33.5	1.2	90.3	
	300만원대	1.2	10.0	62.4	25.9	0.6	88.8	
	400만원대	0.6	6.5	63.5	29.4	0.0	92.9	
	500만원 이상	2.0	6.9	58.4	32.2	0.4	91.0	
학력별	중졸이하	0.0	4.1	58.9	37.0	0.0	95.9	0.2296
	고졸	0.6	11.6	57.5	29.4	0.9	87.8	
	대졸이상	1.7	7.7	59.8	30.3	0.6	90.7	
권역별	수도권	1.6	8.5	59.8	29.3	0.9	89.9	0.7374
	중부권	0.6	7.1	61.8	30.6	0.0	92.4	
	호남권	2.0	11.7	53.9	31.2	1.3	86.4	
	영남권	0.7	8.4	59.0	31.5	0.4	90.8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 예측

<표 4-21>에는 올해 대비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한 변수별 분석한 세부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1> 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비교

(단위: %)

구분	크게 떨어질것	떨어질것	동일할것	나아질것	크게 나아질것	동일할 것 이상	p
합계	0.8	3.7	47.2	45.3	3.1	95.6	-
성별	남	0.6	4.4	45.6	46.5	2.9	0.637
	여	0.9	2.9	48.9	44.0	3.4	
연령 군별	20대	1.7	5.1	51.1	39.8	2.3	0.0003 ***
	30대	1.5	2.5	58.6	35.9	1.5	
	40대	0.5	4.4	48.0	45.1	2.0	
	50대	0.0	2.1	42.8	50.0	5.2	
	60대 이상	0.0	4.5	32.7	57.7	5.1	
직업별	공무원	0.0	4.4	21.7	65.2	8.7	0.4567
	기능직	0.0	7.5	37.5	47.5	7.5	
	무직	0.0	4.6	35.4	56.9	3.1	
	사무관리직	0.8	3.3	44.3	48.4	3.3	
	사무기술직	1.3	3.4	53.0	40.2	2.1	
	자영업	1.1	3.3	47.8	45.6	2.2	
	전문자유직	2.0	2.0	40.8	51.0	4.1	
	주부	0.0	1.7	49.4	46.6	2.3	
판매서비스직	0.0	5.5	50.9	38.2	5.5		
학생	1.4	6.9	52.8	36.1	2.8	91.7	
소득별	100만원 미만	0.0	0.0	35.7	60.7	3.6	0.0766
	100만원대	2.4	5.7	50.4	37.4	4.1	
	200만원대	0.0	4.3	43.9	50.6	1.2	
	300만원대	0.6	5.3	50.0	42.4	1.8	
	400만원대	0.0	1.8	50.0	45.3	2.9	
500만원 이상	1.2	3.3	46.5	44.1	4.9	95.5	
학력별	중졸이하	0.0	1.4	38.4	56.2	4.1	0.0284 *
	고졸	0.6	6.3	44.1	46.9	2.2	
	대졸이상	0.9	2.4	50.3	42.8	3.6	
권역별	수도권	0.9	3.1	50.9	42.8	2.2	0.2574
	중부권	0.6	3.3	43.2	50.8	2.2	
	호남권	1.3	7.1	46.1	41.6	3.9	
	영남권	0.4	2.6	46.2	46.5	4.4	

2.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4-22>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안전체감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0%로 5개 평가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얻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소비자 포럼에서 학교 매점보다 학교앞 문방구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더 많이 판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문방구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 및 정책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해계층의 반대가 심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게 형성되어있는 실정이다⁵⁾.

<표 4-2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파트별 체감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응답 자수	928	103	426	317	78	4	399
		비율	100.0	11.1	45.9	34.2	8.4	0.4	43.0

나. 안전체감도에 대한 세부분석

<표 4-23>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 20대, 학생, 100만원 미만, 중졸이하, 중부권 거주자의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이승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제4회 소비자 포럼 개최-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표 4-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정도의 세부분석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11.1	45.9	34.2	8.4	0.4	43.0	-
성별	남	9.3	41.9	36.7	11.6	0.4	48.8	0.0002 ***
	여	13.0	50.2	31.4	4.9	0.5	36.8	
연령군별	20대	9.7	38.1	38.6	13.1	0.6	52.3	0.0054 ***
	30대	14.1	49.0	28.3	8.6	0.0	36.9	
	40대	13.2	45.1	34.8	6.4	0.5	41.7	
	50대	9.3	53.6	32.5	4.6	0.0	37.1	
	60대 이상	8.3	42.3	37.8	10.3	1.3	49.4	
직업별	공무원	13.0	34.8	43.5	8.7	0.0	52.2	0.1173
	기능직	10.0	42.5	37.5	10.0	0.0	47.5	
	무직	6.2	46.2	38.5	9.2	0.0	47.7	
	사무관리직	12.3	47.5	29.5	10.7	0.0	40.2	
	사무기술직	13.7	44.0	34.6	7.7	0.0	42.3	
	자영업	10.0	44.4	35.6	7.8	2.2	45.6	
	전문자유직	10.2	49.0	32.7	6.1	2.0	40.8	
	주부	11.8	53.9	32.0	1.7	0.6	34.3	
	판매서비스직	9.1	43.6	30.9	16.4	0.0	47.3	
학생	6.9	36.1	38.9	18.1	0.0	57.0		
소득별	100만원 미만	10.7	42.9	33.9	10.7	1.8	46.4	0.3868
	100만원대	14.6	39.8	34.2	10.6	0.8	45.5	
	200만원대	7.9	48.2	34.8	7.9	1.2	43.9	
	300만원대	9.4	55.3	30.0	5.3	0.0	35.3	
	400만원대	11.8	42.9	35.9	9.4	0.0	45.3	
	500만원 이상	12.2	43.7	35.5	8.6	0.0	44.1	
학력별	중졸이하	9.6	35.6	45.2	8.2	1.4	54.8	0.0409 *
	고졸	8.1	46.9	36.3	8.1	0.6	45.0	
	대졸이상	13.1	46.7	31.4	8.6	0.2	40.2	
권역별	수도권	10.4	43.1	34.9	11.3	0.3	46.5	0.0604
	중부권	12.6	41.5	32.8	12.0	1.1	45.9	
	호남권	8.4	47.4	38.3	5.2	0.7	44.2	
	영남권	12.5	51.3	31.9	4.4	0.0	36.3	

다.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표 4-24>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3%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관리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528	100.0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	160	30.3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37	25.9
정부의 관리 미흡	82	15.5
언론의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56	10.6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52	9.8
막연히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많다는 생각 때문	42	7.9

라. 판매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25>에는 불량식품 판매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사무기술직과 100만원대, 고졸, 중부권 거주 조사대상자는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불량식품이 판매되는 주된 이유로 응답한 반면에 나머지 조사대상 계층은 모두 실제 불량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본적 있는 것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표 4-25〉 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25.9	15.5	10.6	30.3	7.9	9.8	-
성별	남	26.3	13.4	9.3	33.6	8.1	9.3	0.5524
	여	25.5	17.4	11.7	27.3	7.8	10.3	
연령군별	20대	22.6	10.7	17.9	28.6	11.9	8.3	0.1375
	30대	21.6	20.8	6.4	33.6	8.8	8.8	
	40대	29.4	14.3	8.4	30.3	5.0	12.6	
	50대	31.2	13.9	9.0	30.3	4.1	11.5	
	60대 이상	22.8	16.5	15.2	26.6	12.7	6.3	
직업별	공무원	27.3	9.1	9.1	36.4	9.1	9.1	0.6648
	기능직	47.6	9.5	9.5	23.8	4.8	4.8	
	무직	26.5	23.5	2.9	32.4	5.9	8.8	
	사무관리직	24.7	12.3	5.5	34.3	6.9	16.4	
	사무기술직	33.3	14.8	10.4	29.6	5.9	5.9	
	자영업	16.3	22.5	10.2	26.5	10.2	14.3	
	전문자유직	24.1	10.3	10.3	31.0	6.9	17.2	
	주부	21.4	17.1	13.7	29.1	10.3	8.6	
	판매서비스직	27.6	17.2	13.8	31.0	3.5	6.9	
학생	12.9	9.7	19.4	32.3	16.1	9.7		
소득별	100만원 미만	20.0	20.0	13.3	26.7	10.0	10.0	0.8511
	100만원대	29.9	13.4	7.5	28.4	10.5	10.5	
	200만원대	18.5	19.6	10.9	31.5	6.5	13.0	
	300만원대	30.9	8.2	8.2	32.7	9.1	10.9	
	400만원대	23.7	18.3	9.7	31.2	8.6	8.6	
500만원 이상	27.7	16.8	13.9	28.5	5.8	7.3		
학력별	중졸이하	24.2	9.1	12.1	39.4	9.1	6.1	0.1089
	고졸	29.0	14.2	15.3	24.4	9.7	7.4	
	대졸이상	24.4	16.9	7.8	32.5	6.9	11.6	
권역별	수도권	26.5	19.4	10.6	26.5	6.5	10.6	0.3547
	중부권	30.3	9.1	12.1	27.3	13.1	8.1	
	호남권	22.1	19.8	12.8	31.4	4.7	9.3	
	영남권	24.7	13.2	8.6	35.1	8.1	10.3	

- 주: ①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③ 언론에서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④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많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
 ⑥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함

3. 수입식품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4-26>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2.9%가 안전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26>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파트별 체감도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응답 자수	928	72	365	393	90	8	491
		비율	100.0	7.8	39.3	42.4	9.7	0.9	52.9

나.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27>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정도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20대, 전문직, 500만원 이상, 중졸이하 및 대졸이상, 중부권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만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2013년 전반적인 안전체감도 조사결과와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문직, 500만원 이상, 대졸이상의 특성을 가진 패널층이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인데 1회 조사로는 경향성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표 4-27〉 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의 안전정도 비교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7.8	39.3	42.4	9.7	0.9	52.9	-
성별	남	7.5	37.8	40.5	13.3	1.0	54.8	0.2374
	여	8.1	41.0	44.4	5.8	0.7	50.9	
연령군별	20대	9.7	33.5	42.1	13.1	1.7	56.8	0.6594
	30대	6.6	38.4	48.5	6.6	0.0	55.1	
	40대	7.8	40.7	41.2	9.3	1.0	51.5	
	50대	7.7	41.2	40.2	10.3	0.5	51.0	
	60대 이상	7.1	43.0	39.1	9.6	1.3	50.0	
직업별	공무원	0.0	52.2	30.4	13.0	4.4	47.8	0.7188
	기능직	12.5	35.0	32.5	17.5	2.5	52.5	
	무직	9.2	38.5	43.1	7.7	1.5	52.3	
	사무관리직	10.7	34.4	41.0	13.1	0.8	54.9	
	사무기술직	9.0	35.0	47.4	8.1	0.4	56.0	
	자영업	5.6	37.8	45.6	10.0	1.1	56.7	
	전문자유직	2.0	38.8	46.9	10.2	2.0	59.2	
	주부	5.6	48.3	41.0	4.5	0.6	46.1	
	판매서비스직	10.9	36.4	43.6	9.1	0.0	52.7	
학생	6.9	43.1	31.9	18.1	0.0	5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14.3	39.3	37.5	5.4	3.6	46.4	0.3674
	100만원대	7.3	38.2	39.8	13.0	1.6	54.5	
	200만원대	6.7	41.5	42.7	7.3	1.8	51.8	
	300만원대	5.9	45.3	41.8	7.1	0.0	48.8	
	400만원대	11.2	37.7	40.6	10.6	0.0	51.2	
	500만원 이상	6.1	35.5	46.1	11.8	0.4	58.4	
학력별	중졸이하	6.9	39.7	42.5	9.6	1.4	53.4	0.9822
	고졸	6.9	40.6	41.9	9.4	1.3	52.5	
	대졸이상	8.4	38.5	42.6	9.9	0.6	53.1	
권역별	수도권	9.4	39.3	40.3	10.4	0.6	51.3	0.8143
	중부권	6.0	38.3	44.8	9.3	1.6	55.7	
	호남권	8.4	39.0	40.9	10.4	1.3	52.6	
	영남권	6.6	40.3	44.0	8.8	0.4	53.1	

다. 불안 이유

<표 4-28>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2%로 월등이 많았고, 그 다음은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위생취약국에서 주로 수입,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과한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8>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437	100.0
정부의 관리미흡	202	46.2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부족	88	20.1
주로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	67	15.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과한 보도	61	14.0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음	19	4.4

라. 불안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25>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른 조사항목과는 달리 조사대상 모든 계층에서 정부의 관리 미흡을 일관되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유별로 보면 사무관리직의 30.9%가 수입업체의 안전인식 부족을 지적하였고, 학생의 33.3%가 언론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하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소득 100만원대의 10.0%가 실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중졸이하와 호남권 층의 20.6%가 위생취약국에서 수입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4-29〉 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p
합계		20.1	46.2	14.0	4.4	15.3	-
성별	남	19.3	49.5	15.6	3.2	12.4	0.2153
	여	21.0	42.9	12.3	5.5	18.3	
연령군별	20대	7.9	44.7	23.7	6.6	17.1	0.0493*
	30대	16.9	48.3	16.9	3.4	14.6	
	40대	20.2	48.5	11.1	6.1	14.1	
	50대	25.3	45.3	13.7	1.1	14.7	
	60대 이상	29.5	43.6	5.1	5.1	16.7	
직업별	공무원	8.3	66.7	8.3	8.3	8.3	0.2314
	기능직	15.8	68.4	0.0	5.3	10.5	
	무직	16.1	41.9	22.6	3.2	16.1	
	사무관리직	30.9	40.0	12.7	1.8	14.6	
	사무기술직	17.5	52.4	10.7	4.9	14.6	
	자영업	18.0	51.3	7.7	5.1	18.0	
	전문자유직	20.0	30.0	15.0	10.0	25.0	
	주부	28.1	39.6	14.6	3.1	14.6	
	판매서비스직	15.4	46.2	11.5	7.7	19.2	
학생	5.6	44.4	33.3	2.8	13.9		
소득별	100만원 미만	10.0	46.7	16.7	13.3	13.3	0.3116
	100만원대	19.6	48.2	10.7	3.6	17.9	
	200만원대	22.8	38.0	19.0	7.6	12.7	
	300만원대	19.5	54.0	13.8	1.2	11.5	
	400만원대	20.5	47.0	8.4	2.4	21.7	
	500만원 이상	21.6	44.1	15.7	3.9	14.7	
학력별	중졸이하	20.6	38.2	17.7	2.9	20.6	0.6647
	고졸	21.7	44.7	17.1	4.6	11.8	
	대졸이상	19.1	48.2	11.6	4.4	16.7	
권역별	수도권	23.2	47.1	12.9	3.2	13.6	0.7778
	중부권	16.1	46.9	19.8	4.9	12.4	
	호남권	21.9	43.8	9.6	4.1	20.6	
	영남권	18.0	46.1	14.1	5.5	16.4	

- 주: ①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③ 언론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④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음
 ⑤ 주로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함

4. 단체 급식

가. 안전체감도

<표 4-30>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73.4%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0>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파트별 체감도	단체급식 안전	응답 자수	928	22	225	431	239	11	681
		비율	100.0	2.4	24.3	46.4	25.8	1.2	73.4

나.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31>에는 단체급식의 안전정도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20대, 학생, 500만원 이상, 중졸이하, 호남권 거주 특성을 갖은 조사대상자의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체감도를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여자, 30대, 기능직, 100만원 미만, 대졸이상, 수도권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1〉 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비교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2.4	24.3	46.4	25.8	1.2	73.4	-
성별	남	2.3	20.8	46.3	29.7	1.0	77.0	0.0102 *
	여	2.5	28.0	46.6	21.5	1.4	69.5	
연령군별	20대	4.6	18.2	45.5	30.7	1.1	77.3	0.1258
	30대	1.5	31.3	51.5	14.7	1.0	67.2	
	40대	3.9	24.5	46.1	24.5	1.0	71.6	
	50대	1.6	23.7	39.7	33.0	2.1	74.7	
	60대 이상	0.0	22.4	50.0	26.9	0.6	77.6	
직업별	공무원	0.0	8.7	56.5	34.8	0.0	91.3	0.1505
	기능직	2.5	30.0	37.5	25.0	5.0	67.5	
	무직	0.0	29.2	41.5	27.7	1.5	70.8	
	사무관리직	3.3	27.1	37.7	28.7	3.3	69.7	
	사무기술직	4.3	23.5	48.7	23.1	0.4	72.2	
	자영업	0.0	20.0	47.8	32.2	0.0	80.0	
	전문자유직	2.0	20.4	53.1	24.5	0.0	77.6	
	주부	1.1	29.2	48.3	20.2	1.1	69.7	
	판매서비스직	3.6	25.5	49.1	20.0	1.8	70.9	
	학생	2.8	13.9	47.2	36.1	0.0	83.3	
소득별	100만원 미만	5.4	30.4	44.6	16.1	3.6	64.3	0.4150
	100만원대	3.3	26.8	45.5	23.6	0.8	69.9	
	200만원대	1.8	25.6	46.3	25.0	1.2	72.6	
	300만원대	1.2	25.3	47.7	25.9	0.0	73.5	
	400만원대	1.8	24.1	50.0	24.1	0.0	74.1	
	500만원 이상	2.9	20.0	44.1	30.6	2.5	77.1	
학력별	중졸이하	0.0	20.6	57.5	19.2	2.7	79.5	0.4277
	고졸	2.8	23.4	44.4	28.4	0.9	73.8	
	대졸이상	2.4	25.2	46.2	25.1	1.1	72.3	
권역별	수도권	3.8	28.0	43.1	24.2	0.9	68.2	0.0183
	중부권	2.7	20.8	46.5	28.4	1.6	76.5	
	호남권	0.0	18.8	50.0	30.5	0.7	81.2	
	영남권	1.8	25.3	48.4	23.1	1.5	72.9	

다. 불안 이유

<표 4-32>에는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급식관리자, 식재료 공급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주요 이유라는 응답이 전체의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업자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해서가 21.5%, 정부의 관리 미흡이 16.6%, 그리고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 경험인 12.2%로 조사되었다.

이 분야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담당자의 안전 인식 미흡과 정부의 관리 소홀이 빠짐없이 속해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표 4-32>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247	100.0
급식관리자,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89	36.0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53	21.5
정부의 관리 미흡	41	16.6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된 적이 있음	30	12.2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24	9.7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10	4.1

라. 불안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33>에는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이 조사항목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도 조사대상 계층별로 차이없이 급식관리자, 식재료 공급업체의 안전의식 부족이 단체급식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3〉 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36.0	16.6	9.7	12.2	4.1	21.5	-	
성별	남	36.0	13.5	10.8	13.5	6.3	19.8	0.4792
	여	36.0	19.1	8.8	11.0	2.2	22.8	
연령군별	20대	27.5	10.0	12.5	20.0	5.0	25.0	0.4699
	30대	29.2	13.9	12.3	15.4	4.6	24.6	
	40대	43.1	17.2	10.3	6.9	5.2	17.2	
	50대	42.9	24.5	8.2	4.1	4.1	16.3	
	60대 이상	37.1	17.1	2.9	17.1	0.0	25.7	
직업별	공무원	50.0	50.0	0.0	0.0	0.0	0.0	0.4142
	기능직	38.5	7.7	15.4	15.4	15.4	7.7	
	무직	52.6	5.3	5.3	10.5	5.3	21.1	
	사무관리직	18.9	10.8	18.9	16.2	2.7	32.4	
	사무기술직	33.9	20.0	9.2	12.3	3.1	21.5	
	자영업	38.9	16.7	5.6	16.7	5.6	16.7	
	전문자유직	63.6	0.0	18.2	0.0	0.0	18.2	
	주부	40.7	25.9	3.7	9.3	0.0	20.4	
	판매서비스직	37.5	18.8	6.3	6.3	12.5	18.8	
학생	16.7	8.3	16.7	25.0	8.3	25.0		
소득별	100만원 미만	30.0	5.0	5.0	20.0	15.0	25.0	0.7035
	100만원대	35.1	24.3	2.7	13.5	5.4	18.9	
	200만원대	37.8	17.8	8.9	8.9	2.2	24.4	
	300만원대	35.6	11.1	15.6	11.1	2.2	24.4	
	400만원대	38.6	18.2	6.8	9.1	4.6	22.7	
	500만원 이상	35.7	17.9	14.3	14.3	1.8	16.1	
학력별	중졸이하	26.7	20.0	6.7	13.3	0.0	33.3	0.2411
	고졸	46.4	17.9	8.3	9.5	6.0	11.9	
	대졸이상	31.1	15.5	10.8	13.5	3.4	25.7	
권역별	수도권	33.7	16.8	12.9	9.9	3.0	23.8	0.6312
	중부권	39.5	11.6	9.3	7.0	7.0	25.6	
	호남권	27.6	17.2	13.8	17.2	6.9	17.2	
	영남권	40.5	18.9	4.1	16.2	2.7	17.6	

- 주: ①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③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④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된 적이 있음
 ⑤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함
 ⑥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함

5. 외식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4-34>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28명의 패널중 74.5%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안전체감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4-34> 외식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파트별 체감도	외식 안전	응답 자수	928	24	213	538	149	4	691
		비율	100.0	2.6	23.0	58.0	16.1	0.4	74.5

나.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35>에는 외식의 안전체감도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20대, 무직, 400만원대, 중졸이하, 호남권 거주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5〉 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정도 비교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2.6	23.0	58.0	16.1	0.4	74.5	-
성별	남	2.3	17.4	57.9	21.6	0.8	80.3	<0.0001 ***
	여	2.9	28.9	58.1	10.1	0.0	68.2	
연령군별	20대	2.3	20.5	59.1	17.6	0.6	77.3	0.8540
	30대	2.5	24.8	60.1	12.6	0.0	72.7	
	40대	2.5	23.5	56.9	17.2	0.0	74.0	
	50대	3.1	23.7	53.6	19.6	0.0	73.2	
	60대 이상	2.6	21.8	60.9	12.8	1.9	75.6	
직업별	공무원	0.0	26.1	52.2	17.4	4.4	73.9	0.6817
	기능직	0.0	22.5	65.0	12.5	0.0	77.5	
	무직	0.0	18.5	61.5	15.4	4.6	81.5	
	사무관리직	1.6	25.4	49.2	23.8	0.0	73.0	
	사무기술직	3.0	20.5	57.7	18.8	0.0	76.5	
	자영업	4.4	17.8	62.2	15.6	0.0	77.8	
	전문자유직	2.0	28.6	51.0	18.4	0.0	69.4	
	주부	3.9	27.0	60.7	8.4	0.0	69.1	
	판매서비스직	5.5	18.2	61.8	14.6	0.0	76.4	
학생	0.0	26.4	58.3	15.3	0.0	73.6		
소득별	100만원 미만	3.6	16.1	64.3	12.5	3.6	80.4	0.4855
	100만원대	2.4	26.0	54.5	15.5	1.6	71.6	
	200만원대	3.7	25.6	60.4	10.4	0.0	70.7	
	300만원대	4.1	23.5	59.4	12.9	0.0	72.4	
	400만원대	0.6	22.9	59.4	17.1	0.0	76.5	
	500만원 이상	2.0	20.8	54.7	22.5	0.0	77.1	
학력별	중졸이하	2.7	16.4	64.4	12.3	4.1	80.8	0.4293
	고졸	2.8	23.1	61.6	12.5	0.0	74.1	
	대졸이상	2.4	23.7	55.0	18.7	0.2	73.8	
권역별	수도권	1.9	22.3	58.5	17.3	0.0	75.8	0.1683
	중부권	2.7	22.4	61.2	13.1	0.6	74.9	
	호남권	3.9	16.9	59.7	18.2	1.3	79.2	
	영남권	2.6	27.5	54.2	15.4	0.4	70.0	

다. 불안이유

<표 4-36>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36>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237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	104	43.9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64	27.0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음	27	11.4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관리 소홀	26	11.0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제도 부족	16	6.8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인식 부족에 의한 비위생적인 조리가 주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저가 식재료 선호 및 사용,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 받은 경험이 있음, 정부의 관리 미흡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라. 불안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37>에는 외식의 불안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조사대상 계층에서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를 으뜸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층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를 보면 100만원 이하가 정부의 위생관리 소홀, 400만원대가 저가 식재료 사용, 공무원이 실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받은 경험, 그리고 기능직이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7〉 대상자 특성별 외식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p
합계		43.9	11.0	27.0	11.4	6.8	-
성별	남	37.9	15.8	24.2	12.6	9.5	0.1325
	여	47.9	7.8	28.9	10.6	4.9	
연령군별	20대	40.0	15.0	20.0	12.5	12.5	0.8125
	30대	46.3	7.4	27.8	13.0	5.6	
	40대	50.9	13.2	18.9	11.3	5.7	
	50대	38.5	11.5	34.6	7.7	7.7	
	60대 이상	42.1	7.9	34.2	13.2	2.6	
직업별	공무원	33.3	0.0	33.3	33.3	0.0	0.1202
	기능직	44.4	0.0	33.3	0.0	22.2	
	무직	33.3	25.0	25.0	16.7	0.0	
	사무관리직	51.5	12.1	21.2	6.1	9.1	
	사무기술직	47.3	5.5	21.8	18.2	7.3	
	자영업	30.0	20.0	25.0	10.0	15.0	
	전문자유직	53.3	13.3	26.7	6.7	0.0	
	주부	41.8	7.3	40.0	7.3	3.6	
	판매서비스직	53.9	0.0	38.5	7.7	0.0	
학생	36.8	31.6	5.3	15.8	10.5		
소득별	100만원 미만	36.4	27.3	9.1	18.2	9.1	0.0305 *
	100만원대	42.9	20.0	25.7	11.4	0.0	
	200만원대	47.9	4.2	18.8	14.6	14.6	
	300만원대	36.2	19.2	29.8	10.6	4.3	
	400만원대	42.5	5.0	45.0	5.0	2.5	
500만원 이상	50.0	5.4	23.2	12.5	8.9		
학력별	중졸이하	57.1	0.0	42.9	0.0	0.0	0.4192
	고졸	43.4	14.5	22.9	13.3	6.0	
	대졸이상	42.9	10.0	27.9	11.4	7.9	
권역별	수도권	42.9	6.5	27.3	18.2	5.2	0.0641
	중부권	45.7	10.9	32.6	8.7	2.2	
	호남권	28.1	18.8	28.1	6.3	18.8	
	영남권	50.0	12.2	23.2	8.5	6.1	

- 주: ①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함
 ②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관리가 소홀함
 ③ 저가 식재료 사용을 선호함
 ④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음
 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제도가 부족함

6. 제조·유통식품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4-38>에는 현재 시중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38> 유통식품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파트별 체감도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	응답 자수	928	13	178	501	228	8	737
		비율	100.0	1.4	19.2	54.0	24.6	0.9	79.4

나.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39>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세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이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20대, 자영업, 200만원대, 고졸, 중부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9〉 대상자 특성별 제조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비교

구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p
합계		1.4	19.2	54.0	24.6	0.9	79.4	—
성별	남	1.7	14.7	51.0	30.9	1.7	83.6	0.0010 **
	여	1.1	24.0	57.2	17.7	0.0	74.9	
연령군별	20대	2.3	13.6	51.1	31.3	1.7	84.1	0.0833
	30대	1.5	17.7	57.1	23.7	0.0	80.8	
	40대	1.0	17.7	55.4	25.0	1.0	81.4	
	50대	1.0	21.7	55.2	21.1	1.0	77.3	
	60대 이상	1.3	26.3	50.0	21.8	0.6	72.4	
직업별	공무원	0.0	21.7	39.1	39.1	0.0	78.3	0.2602
	기능직	0.0	25.0	55.0	20.0	0.0	75.0	
	무직	0.0	24.6	41.5	32.3	1.5	75.4	
	사무관리직	0.8	21.3	46.7	29.5	1.6	77.9	
	사무기술직	0.9	18.8	56.8	22.7	0.9	80.3	
	자영업	3.3	7.8	66.7	21.1	1.1	88.9	
	전문자유직	2.0	14.3	59.2	24.5	0.0	83.7	
	주부	1.7	24.2	59.6	14.6	0.0	74.2	
	판매서비스직	1.8	20.0	49.1	29.1	0.0	78.2	
학생	2.8	12.5	43.1	38.9	2.8	84.7		
소득별	100만원 미만	3.6	19.6	50.0	23.2	3.6	76.8	0.2941
	100만원대	1.6	25.2	51.2	22.0	0.0	73.2	
	200만원대	1.2	15.2	57.9	24.4	1.2	83.5	
	300만원대	1.2	16.5	60.0	21.8	0.6	82.4	
	400만원대	1.2	18.8	58.2	21.2	0.6	80.0	
	500만원 이상	1.2	20.8	46.5	30.6	0.8	78.0	
학력별	중졸이하	1.4	20.6	56.2	20.6	1.4	78.1	0.8707
	고졸	0.9	18.8	56.6	22.8	0.9	80.3	
	대졸이상	1.7	19.3	52.2	26.2	0.8	79.1	
권역별	수도권	1.9	23.3	51.3	23.0	0.6	74.9	0.0578
	중부권	0.6	15.3	56.8	26.8	0.6	84.2	
	호남권	2.6	14.9	57.8	22.7	2.0	82.5	
	영남권	0.7	19.4	53.1	26.0	0.7	79.9	

다. 불안 이유

<표 4-40>에는 제조·유통식품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단속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2.5%, 식품제조업자의 안전 의식 부족이 31.9%로 가장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식품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냉장냉동 등 식품보관이 불량하여로 조사되었다.

<표 4-40> 제조·유통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응답비율
합계	191	100.0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 미흡	62	32.5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 의식이 부족	61	31.9
식품보관(냉장, 냉동)상태가 적절하지 않음	39	20.4
식품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함	28	14.7
기타	1	0.5

라. 불안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41>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업체에 대한 단속 미흡이 전체의 32.5%,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인식 부족이 31.9%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냉장·냉동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식품업체의 영세성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의 영세성과 식품안전과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표 4-41〉 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p
합계		14.7	31.9	32.5	20.4	0.5	-
성별	남	13.9	32.9	29.1	22.8	1.3	0.6732
	여	15.2	31.3	34.8	18.8	0.0	
연령군별	20대	10.7	21.4	50.0	17.9	0.0	0.4537
	30대	5.3	39.5	34.2	18.4	2.6	
	40대	18.4	34.2	21.1	26.3	0.0	
	50대	22.7	29.6	29.6	18.2	0.0	
	60대 이상	14.0	32.6	32.6	20.9	0.0	
직업별	공무원	0.0	20.0	20.0	60.0	0.0	0.4525
	기능직	30.0	20.0	20.0	20.0	10.0	
	무직	0.0	37.5	43.8	18.8	0.0	
	사무관리직	22.2	37.0	22.2	18.5	0.0	
	사무기술직	15.2	32.6	32.6	19.6	0.0	
	자영업	20.0	30.0	40.0	10.0	0.0	
	전문자유직	0.0	37.5	37.5	25.0	0.0	
	주부	13.0	34.8	32.6	19.6	0.0	
	판매서비스직	25.0	16.7	33.3	25.0	0.0	
	학생	9.1	27.3	45.5	18.2	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0.0	23.1	61.5	15.4	0.0	0.7071
	100만원대	12.1	33.3	27.3	24.2	3.0	
	200만원대	18.5	37.0	29.6	14.8	0.0	
	300만원대	13.3	36.7	33.3	16.7	0.0	
	400만원대	17.7	20.6	32.4	29.4	0.0	
	500만원 이상	16.7	35.2	29.6	18.5	0.0	
학력별	중졸이하	25.0	18.8	31.3	25.0	0.0	0.8589
	고졸	14.3	31.8	36.5	17.5	0.0	
	대졸이상	13.4	33.9	30.4	21.4	0.9	
권역별	수도권	17.5	36.3	25.0	21.3	0.0	0.334
	중부권	13.8	17.2	37.9	27.6	3.5	
	호남권	14.8	29.6	33.3	22.2	0.0	
	영남권	10.9	34.6	40.0	14.6	0.0	

- 주: ① 식품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함
 ②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 의식이 부족함
 ③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함
 ④ 식품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미흡이 전체적으로 가장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는데 유독 40대와 공무원 직업을 가진 조사대상계층에서는 냉장·냉동 등 식품보관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7. 불량식품 근절

가. 인지도

<표 4-42>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68.3%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세부항목	구분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이상
인지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응답 자수	928	49	245	323	244	67	634
		비율	100.0	5.3	26.4	34.8	26.3	7.2	68.3

나. 인지도 세부분석

<표 4-43>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50대, 공무원, 500만원대 이상, 중부권 거주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의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연령군별, 직업별 차이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별에 의한 차이도 의미있게 볼 수 있었다.

〈표 4-43〉 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 비교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이상	p
합계		5.3	26.4	34.8	26.3	7.2	68.3	-
성별	남	3.9	24.5	33.4	28.2	10.0	71.6	0.0266 *
	여	6.7	28.5	36.3	24.2	4.3	64.8	
연령군별	20대	7.4	44.3	27.8	16.5	4.0	48.3	<0.0001 ***
	30대	8.1	35.9	37.4	15.2	3.5	56.1	
	40대	4.9	23.5	36.8	27.5	7.4	71.6	
	50대	3.6	11.3	36.6	37.6	10.8	85.1	
	60대 이상	1.9	16.7	34.6	35.9	10.9	81.4	
직업별	공무원	0.0	13.0	30.4	52.2	4.4	87.0	0.0025 **
	기능직	2.5	20.0	45.0	27.5	5.0	77.5	
	무직	7.7	24.6	32.3	29.2	6.2	67.7	
	사무관리직	5.7	18.0	33.6	29.5	13.1	76.2	
	사무기술직	5.1	28.2	35.9	26.5	4.3	66.7	
	자영업	2.2	24.4	40.0	21.1	12.2	73.3	
	전문자유직	8.2	18.4	24.5	30.6	18.4	73.5	
	주부	6.2	26.4	37.6	27.0	2.8	67.4	
	판매서비스직	7.3	32.7	27.3	23.6	9.1	60.0	
학생	4.2	47.2	30.6	12.5	5.6	48.6		
소득별	100만원 미만	12.5	25.0	30.4	30.4	1.8	62.5	0.0655
	100만원대	4.9	30.1	35.0	22.8	7.3	65.0	
	200만원대	6.1	31.7	36.0	21.3	4.9	62.2	
	300만원대	4.7	29.4	38.8	21.8	5.3	65.9	
	400만원대	4.7	23.5	31.8	32.4	7.7	71.8	
	500만원 이상	4.1	21.2	34.3	29.4	11.0	74.7	
학력별	중졸이하	2.7	27.4	34.3	30.1	5.5	69.9	0.9221
	고졸	6.3	25.0	40.6	22.2	5.9	68.8	
	대졸이상	5.1	27.1	31.4	28.2	8.2	67.8	
권역별	수도권	6.3	26.4	33.3	28.9	5.0	67.3	0.9278
	중부권	3.8	26.2	37.2	20.8	12.0	70.0	
	호남권	7.1	25.3	32.5	27.9	7.1	67.5	
	영남권	4.0	27.1	36.3	26.0	6.6	68.9	

다.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4-44>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1.1%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실제 불량식품을 팔면 경제적 이익 발생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4>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약함	474	51.1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1	21.7
불량식품을 팔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큼	140	15.1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109	11.8
기타	4	0.4

라.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45>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이 공무원인 조사대상자만 식품업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전체의 47.8%가 지적인 반면에 나머지 조사대상계층은 모두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주된 이유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령군별과 직업별로 나타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5〉 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p
합계		51.1	21.7	15.1	11.8	0.4	-
성별	남	50.0	22.0	16.6	10.6	0.8	0.1552
	여	52.2	21.3	13.5	13.0	0.0	
연령군별	20대	36.9	23.3	10.2	29.0	0.6	<0.0001 ***
	30대	50.5	22.2	14.1	12.6	0.5	
	40대	51.0	22.1	19.1	7.8	0.0	
	50대	56.2	19.1	18.6	5.7	0.5	
	60대 이상	61.5	21.8	12.2	3.9	0.6	
직업별	공무원	21.7	47.8	26.1	4.4	0.0	<0.0001 ***
	기능직	55.0	17.5	22.5	5.0	0.0	
	무직	58.5	20.0	10.8	9.2	1.5	
	사무관리직	47.5	27.1	17.2	7.4	0.8	
	사무기술직	45.3	23.1	17.1	14.1	0.4	
	자영업	63.3	7.8	16.7	12.2	0.0	
	전문자유직	53.1	20.4	20.4	6.1	0.0	
	주부	62.4	20.2	10.7	6.7	0.0	
	판매서비스직	47.3	21.8	12.7	18.2	0.0	
학생	34.7	25.0	8.3	30.6	1.4		
소득별	100만원 미만	58.9	10.7	14.3	16.1	0.0	0.1056
	100만원대	56.1	21.1	10.6	11.4	0.8	
	200만원대	53.7	20.7	11.6	14.0	0.0	
	300만원대	55.9	22.4	12.4	8.8	0.6	
	400만원대	49.4	18.8	17.7	14.1	0.0	
	500만원 이상	42.9	26.5	20.0	9.8	0.8	
학력별	중졸이하	60.3	19.2	15.1	5.5	0.0	0.1372
	고졸	52.8	18.8	14.1	14.4	0.0	
	대졸이상	48.8	23.7	15.7	11.0	0.8	
권역별	수도권	49.4	23.3	14.2	12.3	0.9	0.4011
	중부권	49.7	23.5	15.3	11.5	0.0	
	호남권	48.7	22.1	13.0	15.6	0.7	
	영남권	55.3	18.3	17.2	9.2	0.0	

주: ①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②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함
 ③ 불량식품을 팔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큼
 ④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⑤ 기타

8. 정책현안

가. 현안

<표 4-46>에는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46>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지자체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353	38.0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선	250	26.9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 강화	182	19.6
식생활, 식품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81	8.7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부 정책의 홍보 강화	58	6.3
기타	4	0.4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38.0%가 지자체의 감시감독 강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공무원의 경우 52.2%가 지자체 감시감독 강화가 현안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조사대상계층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보였다 (표 4-47).

나. 현안에 관한 세부분석

<표 4-47>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계층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34.3%가 정부발표에 신뢰감 제고 및 11.0%가 정부정책 홍보 강화, 학생의 16.7%가 식생활 등 식품정보 제공 강화를 식품안전분야 정책 현안으로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4-47〉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19.6	26.9	38.0	6.3	8.7	0.4	-
성별	남	21.0	23.7	38.4	7.3	9.1	0.6	0.1763
	여	18.2	30.5	37.7	5.2	8.3	0.2	
연령군별	20대	17.1	27.8	36.9	7.4	10.8	0.0	0.0113
	30대	13.6	32.8	35.9	8.1	9.1	0.5	
	40대	19.6	22.1	42.7	3.9	10.8	1.0	
	50대	19.6	28.4	41.8	3.6	6.7	0.0	
	60대 이상	30.1	23.1	31.4	9.0	5.8	0.6	
직업별	공무원	17.4	17.4	52.2	4.4	8.7	0.0	0.6845
	기능직	25.0	25.0	42.5	2.5	5.0	0.0	
	무직	24.6	20.0	44.6	6.2	4.6	0.0	
	사무관리직	18.9	30.3	34.4	8.2	7.4	0.8	
	사무기술직	15.0	30.8	38.9	4.7	10.3	0.4	
	자영업	23.3	20.0	38.9	8.9	8.9	0.0	
	전문자유직	16.3	24.5	38.8	6.1	12.2	2.0	
	주부	23.0	28.1	37.1	6.2	5.1	0.6	
	판매서비스직	25.5	29.1	30.9	3.6	10.9	0.0	
학생	13.9	25.0	34.7	9.7	16.7	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19.6	25.0	39.3	8.9	7.1	0.0	0.1298
	100만원대	26.8	22.0	39.8	7.3	3.3	0.8	
	200만원대	22.0	26.2	31.1	9.2	11.6	0.0	
	300만원대	18.2	31.2	35.3	5.3	10.0	0.0	
	400만원대	19.4	24.7	40.0	4.1	11.8	0.0	
	500만원 이상	15.5	29.0	42.0	5.3	6.9	1.2	
학력별	중졸이하	34.3	16.4	34.3	11.0	4.1	0.0	0.0099
	고졸	20.3	27.5	36.9	7.2	8.1	0.0	
	대졸이상	17.2	28.0	39.3	5.1	9.7	0.8	
권역별	수도권	20.4	29.3	38.1	3.8	7.9	0.6	0.6133
	중부권	20.2	25.7	34.4	8.2	10.9	0.6	
	호남권	20.1	22.1	39.6	9.1	8.4	0.7	
	영남권	18.0	27.8	39.6	6.2	8.4	0.0	

- 주: ①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 강화
 ②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선
 ③ 지자체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
 ④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부 정책의 홍보 강화
 ⑤ 식생활, 식품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⑥ 기타

9. 식품안전인식

가. 요인

<표 4-48>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48>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28	100.0
방송보도(뉴스, 방송프로그램 등)	614	66.2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30	14.0
주변사람의 의견	49	5.3
정부 보도자료	47	5.1
막연한 불안감	44	4.7
본인 및 친인척의 경험	44	4.7

통계적으로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송보도의 경우 66.2%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의견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요인들은 5% 가량의 응답을 보여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 요인에 관한 세부분석

<표 4-49>에는 식품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막연한 불안감, 기능직은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소득 500만원 이상은 과학적 사실, 학생은 주변사람 의견, 판매서비스직은 정부보도 자료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9〉 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비교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p
합계		4.7	4.7	14.0	66.2	5.3	5.1	
성별	남	4.8	5.8	14.7	65.4	5.4	3.9	0.3683
	여	4.7	3.6	13.2	67.0	5.2	6.3	
연령군별	20대	5.7	5.1	15.3	61.4	7.4	5.1	0.5476
	30대	4.6	4.0	10.6	71.2	5.1	4.6	
	40대	2.9	5.9	14.2	69.1	3.4	4.4	
	50대	4.6	2.6	12.9	67.0	7.2	5.7	
	60대 이상	6.4	6.4	18.0	60.3	3.2	5.8	
직업별	공무원	13.0	4.4	8.7	65.2	4.4	4.4	0.3250
	기능직	5.0	15.0	12.5	60.0	2.5	5.0	
	무직	7.7	9.2	12.3	61.5	3.1	6.2	
	사무관리직	4.9	3.3	18.0	67.2	2.5	4.1	
	사무기술직	4.7	4.3	14.1	68.8	4.7	3.4	
	자영업	3.3	1.1	14.4	66.7	8.9	5.6	
	전문자유직	2.0	6.1	16.3	67.4	4.1	4.1	
	주부	5.1	4.5	10.1	69.7	5.1	5.6	
	판매서비스직	1.8	5.5	18.2	54.6	7.3	12.7	
학생	4.2	2.8	15.3	62.5	11.1	4.2		
소득별	100만원 미만	5.4	7.1	10.7	60.7	7.1	8.9	0.5467
	100만원대	7.3	4.1	12.2	69.9	4.1	2.4	
	200만원대	3.1	4.9	13.4	66.5	6.7	5.5	
	300만원대	4.1	5.9	9.4	70.0	5.9	4.7	
	400만원대	5.9	2.4	13.5	67.1	4.7	6.5	
	500만원 이상	4.1	5.3	19.6	62.0	4.5	4.5	
학력별	중졸이하	6.9	6.9	8.2	65.8	8.2	4.1	0.6842
	고졸	4.1	5.0	15.3	63.8	5.9	5.9	
	대졸이상	4.9	4.3	14.0	67.7	4.5	4.7	
권역별	수도권	6.0	4.4	12.9	66.4	5.4	5.0	0.8833
	중부권	2.7	6.0	12.0	68.9	6.6	3.8	
	호남권	5.2	5.2	16.2	64.9	4.6	3.9	
	영남권	4.4	4.0	15.4	64.8	4.8	6.6	

주: ① 막연한 불안감
 ② 본인 및 가족의 경험
 ③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④ 방송 보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⑤ 주변사람의 의견
 ⑥ 정부 보도 자료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1.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50>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총괄표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보통 이상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2.1	25.8	54.0	17.2	1.0	72.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100.0	11.1	45.9	34.2	8.4	0.4	43.0
수입식품 안전	100.0	7.8	39.3	42.4	9.7	0.9	52.9
단체급식 안전	100.0	2.4	24.3	46.4	25.8	1.2	73.4
외식 안전	100.0	2.6	23.0	58.0	16.1	0.4	74.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00.0	1.4	19.2	54.0	24.6	0.9	79.4

- 조사결과 안전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이유는 정부단속 미흡, 해당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실제 경험 등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남자, 20대, 공무원, 중졸이하, 저소득층 등의 조사대상계층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여자, 30대, 대졸이상, 500만원 이상 조사대상계층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 조사라서인지 공무원 직업 계층의 응답이 다른 조사계층과는 차별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개별층화하여 조사해봄도 심도있게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객관적인 전문가도 개별층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매체 1순위는 인터넷이 차지하였는데 등확률에 의한 젊은 층 패널이 조사에 참여해서로 해석되며, 향후 방송매체와 동일하게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만 소통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 시사점

1. 식품패널 대상 조사성공률이 83.2%로 총 조사완료자는 928명으로 집계되어 패널조사로써 조사성공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향후 식품패널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
2. 통계청에서도 조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 조사원 파견에 의한 방문조사를 지양한다는 정책방향에 걸맞게 각 패널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사전에 조사하여 조사성공률을 높이고, 조사비용을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명년에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항목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겠다. 부가조사항목은 그해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로 구성된다.
4. 올해 사용되었던 조사체계(표본설계 포함)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과 확정이 2014년 조사 실시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식품안전분야는 과거 빈곤했던 시절에는 질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우친 인식과 행정으로 2000년대 이후에야 사회의 주요 관심분야가 되었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식품관련 인증, 표시 등 소비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정책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개발, 발전되었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더딘 분야였으나 최근에는 질병, 사고, 재난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함께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으로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가 되었는데 지난 정권 때 발발했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의한 촛불사건은 이를 잘 입증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식품안전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위험으로써 대응방법이다. 전문가의 경우 과학적 사실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식품안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존의 감성적 판단과 경험 등 다분히 감정적 평가에 의해 대응하여 두 집단간 간극이(gap)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로써 영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인식조사는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안전분야에 포함되어 그나마 조사되어 발표되었는데 사회안전의 한 분야로 포함되다 보니 조사항목도 4개 정도에 그치고 전문성도 없는 등의 이유로 사회조사에서 제외되어 관련 부처에서 생산토록 결정된 바 있다.

20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불량식품 근절이 4대 사회악에 포함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정부의 근절 의지는 역대 정부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해마다 조사하여 발표하고, 정책 수립에 기초하고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조사된 안전체감도는 조사대상자의 72.2%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012년 6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를 정확히 파악

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1. 패널별 조사방법 특화

패널의 성, 연령,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패널 개인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파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조사성공률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통계청이 방문조사에 의한 조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도 걸맞을 것이다.

2. 식품패널 원표본 개선 및 유지율 제고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의 원표본이 1,200명보다 적게 선정되었고, 실제 패널자격이 없는 패널도 180명 정도가 포함됨에 따라 조사성공률이 낮게 나타나 원표본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원표본 유지율 제고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성공률 향상 노력

패널 대상 조사성공률은 85% 이상은 되어야 함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원표본부터 개선하면 더불어 조사성공률도 어느 정도 향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반적인 조사성공률 향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 이원화로 효율성 제고

매해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부가조사

로 패널 조사가 구성,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문지 개발 차별화, 패널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전문가, 공무원 등 특수계층을 조사대상자화하여 다양한 조사결과 산출

식품패널 수를 증가시키면서 전문가, 공무원 층을 포함시키면 바람직하겠지만 패널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의 관리업무가 증가하므로 전문가, 공무원을 개별 조사대상자층으로 구성하여 조사결과를 패널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6. 조사자료의 DB화로 식품안전체감지수 생산 근거 마련

내년부터 1년에 2회씩 조사가 실시됨으로 조사결과 원자료(raw data)를 DB화하여 매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체감지수를 생산하는 변수별 표준화 계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09~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2).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2).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2012).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 신호등표시로 우리아이 영양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1.03.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날 대비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04.15).
- 식품저널(2010~2012). 식품유통연감. 서울: 식품저널.
- 안국찬, 목진휴, 박기묵, 김성철(2010). 사회조사와 통계기법. 법문사.
- 이동률(1998). 표본추출의 의의와 표본추출설계시 고려사항 및 표본의 크기. 고시연구, 288(3), pp.397~399.
- 이승신(201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회 소비자포럼 발표자료(2013.10.04).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2011).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비 지원.
- 한희선(2009). 조사설계를 위한 사회조사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통계청.

통계청(2013).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2013.10.0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09045 에서 2013.10.12. 인출.

Babbie, Earl R.(200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Cengage Learning.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Cengage Learning.

Bartlett, J. E., II, Kotrlik, J. W., & Higgins, C.(2001). Organizational research: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for survey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19(1), pp.43~50.

Kenny, David A.(1987). *Statistics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Boston: Little, Brown.

Kirkwood, James; Robert Hubrecht(2010). *The UFAW Handbook on the Car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Other Research Animals*. Wiley-Blackwell, pp. 29.

Kish, L.(1995). *Survey Sampling*. Wiley-Interscience.

NIST/SEMATECH. 7.2.4.2. Sample sizes required. e-Handbook of Statistical Method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저영양관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에서 2013.12.10. 인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home>.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부록 1.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구분	조사일	ID	조사자 코드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식품패널)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 안전 정보, 식품 사고 및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식품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부 정책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혜 ☎ (02)353-4701

전문연구위원

김동우 ☎ (02)380-8168

연구원

조주연 ☎ (02)380-8297

Part 1. 기본조사

□ 평소 느끼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1.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다음 식품안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 강화
- ②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선
- ③ 지자체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
- ④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부 정책의 홍보 강화
- ⑤ 식생활, 식품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졌음	크게 나아졌음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2-1. (2번 문항에서 나아졌음, 크게 나아졌음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 ②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및 140개 국정과제에 식품안전 포함 등 국가정책 변화
- ③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 ④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⑤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증대

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동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 이제부터는 식품안전에 관한 세부 영역별로 식품안전체감도를 말씀해 주세요.

4.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4-1. (4번 문항에서 매우불안, 불안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 ③ 언론에서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 ④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 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많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
- ⑥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함
- ⑦ 기타

5.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5-1. (5번 문항에서 매우불안, 불안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 ③ 언론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 ④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음
- ⑤ 주로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함
- ⑥ 기타

6.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을 준비한 경험이 있거나 급식대상자이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요

6-1. (6번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신 분에 한함)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단체급식 안전					

6-2. (6-1번 문항에서 매우불안, 불안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이 부족함
- ②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
- ③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보도함
- ④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된 적이 있음
- ⑤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함
- ⑥ 영업자가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함
- ⑦ 기타

7. 외식의 안전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외식 안전					

7-1. (7번 문항에서 매우불안, 불안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함
- ②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관리가 소홀함
- ③ 저가 식재료 사용을 선호함
- ④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음
- 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제도가 부족함
- ⑥ 기타

8. 유통식품의 안전 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					

8-1. (8번 문항에서 매우불안, 불안이라고 응답한 분에 한함)

제조·유통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식품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함
- ②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 의식이 부족함
- ③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함
- ④ 식품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 ⑤ 기타

Part 2. 2013년 부가조사

9. 귀하께서는 평소에 다음의 여러 항목별 불안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환경문제					
자연재해					
중증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범죄					
전쟁, 테러					
식품안전					
교통사고					

10.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막연한 불안감
- ② 본인 및 가족의 경험
- ③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 ④ 방송 보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 ⑤ 주변 사람의 의견
- ⑥ 정부 보도 자료

11.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2.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② 식품제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함
 ③ 불량식품을 팔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큼
 ④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⑤ 기타

13.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항목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 있음	매우 관심있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관심도					

14.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 ①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②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③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④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⑤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 귀하께서 평소에 이용하시는 식품안전 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 ① 식품 기준 규격 및 법령 등
- ② 식생활 정보
- ③ 식품 안전 전문 정보(연구자료, 교수·의사 인터뷰 등)
- ④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 ⑤ 위해식품 정보나 회수(recall) 정보
- ⑥ 기타 (내용: _____)

16. 응답자 일반사항

- 패널 구축시 제공되는 정보 활용
- 지역,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직업

※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